

2010년 업무계획 보고

2010년 업무계획

=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=

2009. 12. 30.



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
농림수산식품부

Ministry for Food, Agriculture, Forestry and Fisheries

= 목 차 =

I . 2009년 추진실적 평가	1
II . 2010년 여건 전망과 정책방향	5
III . 주요 추진과제	9
1. 경영혁신 · 소득증대	
(1) 농어업 경영혁신 · 비용절감	
(2) 농어업 분야 에너지 절감	
(3) 농어가 소득 · 경영 안정	
(4) 농식품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혁	
2. 체질개선 · 미래준비	28
(1) 녹색 성장 및 농식품 R&D 혁신	
(2) 종자 · 생명산업 육성	
(3) 농정추진체계 개편	
(4) 수산업 재도약 기반 구축	
(5) DDA/FTA 대응	

3. 안전식품 · 안정공급 49

(1) 친환경 안전 농식품 공급

(2)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

(3)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

(4) 해외 농림어업 협력 강화

4. 지역경제 활성화 69

(1) 농어촌 산업 육성

(2) 지역 공동 경영체 활성화

(3) 농어촌 복지 · 생활여건 개선

(4) 농림어업 생산기반 확충

(5) 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

I . 2009년 추진실적 평가

1. 성과

① 농어업 선진화 기반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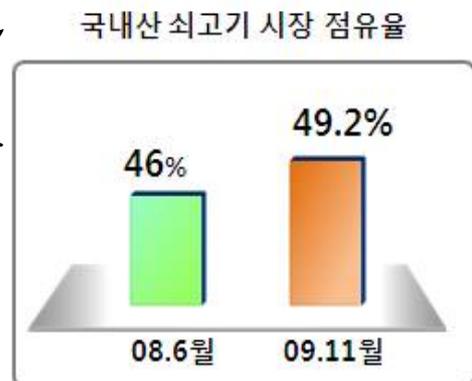
- 농어업계·소비자·정부가 참여하는 **농어업선진화위원회**를 구성, **소통과 거버넌스의 기틀 마련**(공동발표문 채택, '09. 7)
 - 보조금 개편원칙, 직불제 개편 등 42개 주요과제에 합의
- **농협개혁의 1단계로 운영구조 개선 농협법 개정**('09. 4월)
 - 2단계로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추진 중('09. 12월 농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)
 - * 수협법 개정안 국회 농식품위 계류중('09.4월 국회 제출)
- **농지 이용규제 합리화**(농지법 개정, 11.28)
 - 한계농지 소유·전용규제 완화,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완화 등

② 현장 수요자 중심의 농식품 R&D 추진체계 개편 추진

- 「**농림수산물과학기술육성법**」 제정(4월), 농식품 R&D의 총괄조정 및 평가 기능체제 구축
 -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위원회 구성(4월),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(10월)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(9월) 등 추진체계 구축
 - '농림수산물 R&D 육성 5개년 종합계획' 수립(12월)

③ 식품안전 및 유통투명성 제고로 소비자 신뢰 향상

-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강화('08.7월), 쇠고기 이력제 확대('09.6월) 등
 - '08.6월 미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**국내산 쇠고기 시장점유율 상승**
- GAP·HACCP 등 생산단계 위해관리 시스템 및 안전성 조사 강화
 - * 안전성 적합률: (농산물) 97.6%, (축산물) 99.9%, (선진국) 98~99%



④ 식품산업 발전기반 마련 및 농식품 수출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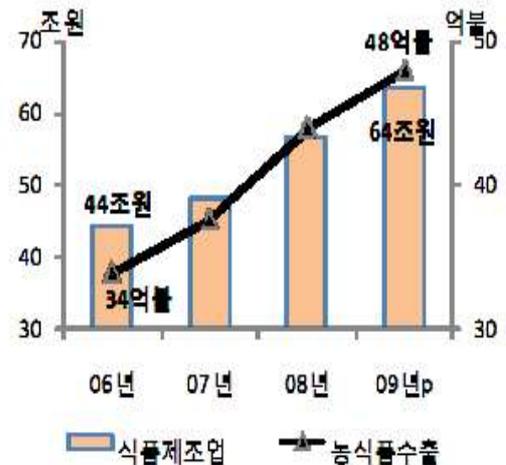
○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추진, 김치연구소 입지선정(7월), '우리술 산업대책' 및 '쌀 가공산업 대책'(8월), 천일염 관리업무 이관(3월) 등

○ 농식품 수출 7% 증가(48억불)

* 11월까지 막걸리 수출 43%, 천일염 수출 119% 증가

○ 한식세계화 붐 조성

* 막걸리 2009 히트상품 1위



⑤ 농어가 소득·경영 안정 강화

○ 농기계 임대사업(농협) 활성화로 농가부담(3.6천억원) 경감

- 지역농협에 임대 전담센터 670개소를 설치, 논농사용 중고농기계 매입(15.7천대) 및 28천ha 농작업 대행

○ 경영이양직불 지급연령 상향조정(70→75세) 등 각종 직불제 확충

○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을 통한 경영희생지원 강화('08 : 1,195억원 → '09 : 1,700) 및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개편('08 : 28품목 → '09 : 34)

○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, 면세유(1.9조원), 화학비료(1,508억원), 사료(1조원 용자) 등 농어가 긴급 경영안정 지원

⑥ 해외농어업자원개발 및 국격제고를 위한 해외협력 강화

○ 민간주도 식량·사료자원 확보를 위한 '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' 수립(6월)

* 농지관리기금에서 민간의 해외 농어업개발 지원(09: 11개 사업, 240억원)

○ 한·러 정상회담('08.9)의 성과로 양국간 불법어업방지 협정을 체결('09.12), '10년 명태쿼터 45천톤 확보('07년 대비 120% 증대)

○ 정상외교를 통해 인니(3월), 캄보디아(10월)에 40만ha 조림지 확보 및 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 창설 합의(6월)

2. 반 성

①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가 소득정체에 대한 대책 미흡

- '08년 농가소득은 '04년 대비 5.2% 증가에 그친 반면, 농업 경영비는 11.1% 증가

* 농가소득 : (04) 29,001천원 → (08) 30,523

* 농업경영비 : (04) 14,572천원 → (08) 16,189

② 생산 조절 및 사전예측 미흡으로 쌀 등 농수산물 수급불안 반복

- 쌀(평년 20만톤, '09년 40만톤 잉여), 배추(58천톤 시장격리) 등

③ 어선세력 과잉(약15%초과), 어장오염 등으로 수산업 경쟁력 약화

④ 기후변화 대응 자연자원 관리 및 환경보전에 정책적 관심 확대 필요

- 재배적지·어족자원 변화, 해파리·꽃매미 피해 발생 등

- 투입재(비료, 농약, 에너지 등) 집약형 생산방식으로 환경부하 가중

* 비료사용량 OECD 4위(396.1kg/ha, '05.기준), 농약사용량 1위(12.9kg/ha, '06.기준)

⑤ 식품산업육성정책은 초기단계로 가시적 성과 미흡

- 막걸리·천일염 등 일부품목이 부각되었으나, 규모화·산업화에 한계

⑥ 농어촌 복지·생활여건은 여전히 도시와 격차가 큰 상황

* 노후주택비율 : 도시 9.1%, 농촌 24.5 병원 1개소당 인구 : 도시 866명, 농촌 1,367

Ⅱ. 2010년 여건 전망과 정책방향

1. 여건 전망

□ 달러 약세 전망에 따라 유가·곡물가 등 원자재 가격 강세 예상

* 국제유가(두바이유) : ('09) 연평균 61~62불/배럴(KIEP) → ('10p) 80불 내외

□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적인 대응 본격화

○ 선진국의 탄소세 부과 등 녹색보호주의 강화 추세

* 프랑스는 2010년부터 17유로/CO₂톤(약 3만원) 부과

○ 우리나라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('09.11월)

* 감축목표 : 2020년 BAU 대비 30% 감축

□ DDA 협상/FTA 확산 등 개방경제 추세 가속화

○ G20 정상회담('09.11월)에서 2010년까지 DDA 협상 타결 목표 설정

○ 우리나라는 미국·EU(협상타결), 호주·뉴질랜드·페루(협상 본격화), 콜롬비아(협상 개시) 등 FTA를 동시 추진

□ 2010년 G20 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국격제고 노력 본격화

* 총리실 주관 '국격제고 정책 추진 TF' 구성('09.10월)

□ 식품안전, 귀농·귀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클 전망

〈 농업·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〉

- ① 국민들의 농업·농촌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지지도는 매우 높음
 - 도시민의 89.3%가 국가경제에서 앞으로도 농업이 중요하다고 인식
 - 가장 중요한 농업·농촌의 역할로 '안전한 식품 공급'을,
 - 농업·농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 농업인은 '농가소득 안정'을, 전문가는 '후계인력 육성'을 각각 주문
 - ② 2009년 정부가 추진한 농업정책에 대하여,
 - 가장 성과가 높은 정책으로 한식세계화 등 식품산업 육성을, 성과가 낮은 정책으로 농가경영안정대책을 선택
 - 확대해야 할 정책으로 농산물 안전성과 후계인력 육성(전문가), 연금지원과 직불제 확대(농업인)를 선택
 - ③ 농가경영 주된 위협요인은 생산비 증가(32.0%)와 인력부족(19.5%)
 - ④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하여도 높은 평가
 - 도시민의 62.5%가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신뢰
 - 83.8%가 우리 농산물이 수입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고 인식
 - ⑤ 도·농간 거주환경 만족도 격차는 19.4%p로 여전히 크며, 특히, 농촌의 삶의 질 만족도는 15.1%로서 매우 낮은 모습
 - 거주환경 만족도 : 도시민 56.2%, 농업인 36.8%
 - 삶의 질 만족도 : 도시민 22.6%, 농업인 15.1%
- ※ 자료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도시민·농업인·전문가 2470명 설문조사(09.10~11월)

2. 중점 추진방향

“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”성장하는
매력적인 농림수산식품산업



경영혁신 · 소득증대

- ▶ 농어업 경영혁신 · 비용 절감
- ▶ 농어업 에너지 절감
- ▶ 농어가 소득 · 경영 안정
- ▶ 농식품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혁

체질개선 · 미래준비

- ▶ 녹색성장 및 농식품 R&D 혁신
- ▶ 종자 · 생명산업 육성
- ▶ 농정추진체계 개편
- ▶ 수산업 재도약 기반 구축
- ▶ DDA/FTA 대응

안전식품 · 안정공급

- ▶ 친환경 안전 농식품 공급
- ▶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
- ▶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
- ▶ 해외 농림어업 협력 강화

지역경제 활성화

- ▶ 농어촌산업 육성
- ▶ 지역공동 경영체 활성화
- ▶ 농어촌 복지 · 생활여건 개선
- ▶ 농림어업 생산기반 확충
- ▶ 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

Ⅲ. 주요 추진과제

1. 경영혁신 · 소득증대

1 농어업 경영혁신 · 비용절감

가 총체적 비용절감

(1) 추진 방향

- ◇ 품목별 낭비요인을 발굴하여 '12년까지 최대 30%까지 절감
- 주요 품목별로 비용절감 목표 및 수단을 명확히 제시

- 비용절감운동을 통해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경영혁신 지원
 - (농어업인) 경영체의 CEO로서 경영비 절감노력 자발적 전개
 - (정부) 사례 발굴 전파, 교육, 정보화 및 미래비전 제시 등으로 비용절감 분위기 확산

단 계	민간(품목단체)	정부(비용절감본부)
1단계 (모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모범사례 발굴 및 체계화(신기술/공동영농 등) ◇ 비용절감을 위한 장기전략 수립 및 제도개선 사례 발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품목별 비용구조 분석 ◇ 전파체계 구축(사례집 발간 및 배포/기관간 네트워크) ◇ 시범농어가 발굴
2단계 (체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농어가 記帳, 전산화 유도 ◇ 농어가 법인화 유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회계 프로그램 개발/보급 ◇ 비용절감 교육, 경영컨설팅 강화
3단계 (혁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비용절감 신기술 발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R&D 우선순위를 비용절감으로 설정 ◇ 연구결과 현장적용(기술센터/농협 등)
4단계 (선순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수익창출을 위한 신투자 집행 ◇ 경영체별 경영개선계획 수립(사업다변화/시장개척/신시장 창출·신제품 개발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제도개선(시장개척/선물거래/생산비 안정장치/인센티브 등) ◇ 평가와 환류(모니터링)

(2) 추진 방안

□ 품목별 비용분석 및 비용절감 사례 발굴·전파 체계 구축

- 경영규모, 경영주 연령, 경영수준 등에 따른 경영비 분석(3월)
- 언론과 연계, 경영혁신 마인드 제고 관련 정기 기획기사 게재
 - (가칭)'농어업 자린고비 공모전'을 개최 비용절감 농어가를 발굴하고 포상·상금·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
- 농수협, 품목단체, 컨설팅업체를 활용, 우수사례 발굴·전파
 - 농어업인 교육에 기장 및 비용절감 프로그램 확대

□ 경영혁신의 기초가 되는 농어가 기장(記帳) 운동 전개

- 현재 5%미만 수준인 농어가기장 비율을 '12년까지 20%로 확대
- 정부지원사업 대상 농어가는 회계교육 이수 및 기장 의무화
- 농어업 경영체 유형별·품목별 회계 프로그램 개발·보급

□ 선진국 수준의 기술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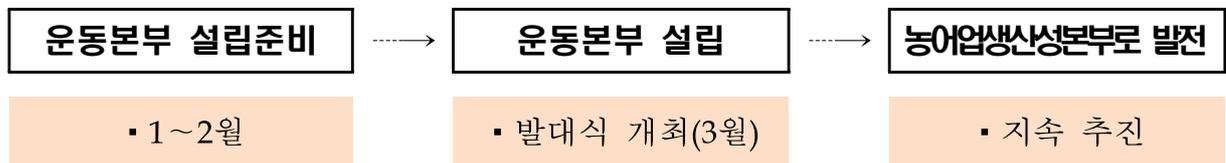
- 분야별 전국 단위 대표실습장 체계 구축
 - 원예전문실습장(경남 진주 ATEC), 축산전문실습장(전남대, 천안 연암대학), IT 기반 첨단농업교육센터(순천대)
- 선도농어가 실습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활성화
 - 전국 선도농어가의 농장·양식장을 현장 실습장으로 지정
 - 선도 농어업인을 현장교수로 임명하여 전문 기술과 노하우 전파
 - * 농어업인 품목교육, 농·수산고·농·수산대 실습교육장으로 활용

□ 가공·유통단계 비용절감, 조직화·계열화, R&D 등을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 지속 추진

나 비용절감운동본부 및 농어업경영혁신단 설립

◇ 민·관 합동 「비용절감운동본부」와 지역단위 「경영혁신단」을 설립, 비용절감 운동의 추진동력 부여

- 비용절감운동본부는 품목조직, 농수협, 컨설팅업체, 정부가 참여하는 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무국으로 구성(3월)
 - 농어업인 단체 등에 의한 자발적 비용절감 노력을 유도
 - 주요기능(예시) : 사례 발굴 및 전파, 농어가기장 및 전산화 운동, 평가 및 환류, 제도개선 과제 발굴



- 비용절감운동을 현장에서 주도할 「농어업경영혁신단」 구성(6월)
 - 품목조직, 농·수협, 시·군기술센터, 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후보자중 비용절감운동본부 위원회에서 선발
 - 후보자는 품목별 소득 10% 이내 농어가, 신기술 보유 농어가, 신지식 농어업인 등
 - '10년중 3,000명 내외의 제1기 혁신단 구성
 - 1기 혁신단 구성후 한국농수산대학이 주관하는 품목별 경영혁신 과정 교육 실시 및 컨설팅 지원
 - 혁신단원은 현장 농어업인과 연계를 통해 경영혁신 사례 전파
 - 소요되는 비용은 비용절감운동본부에서 지원하고, 정책자금 등 지원시 인센티브 부여
- 제2기 혁신단은 제1기 혁신단원이 추천한 농어업인(영농승계자 포함) 중에서 선정하고, 이후 지속적 확산

다 2010년 경영비 절감 계획

◇ 2010년 경영비 비중이 높은 사료비 6%(4,600억원), 비료비 11%(1,000억원) 등 절감추진

□ 사료비 : 한우 · 양돈 · 양계 등

○ 초음파 육질 검사를 통해 출하시기 3개월 단축, 청보리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급여 확대('09 : 40% → '10 : 60%)

○ 써코백신 접종, 시설 현대화, 질병근절 등으로 MSY (모돈당 시장 출하두수) 향상, 성장단계별 적정 사료량 급여

* 돼지사료 급여량 : (부진농가) 356kg/두 → (우수농가) 290(감 18.5%)

○ 소형닭(1.5kg) 위주의 생산체계를 대형닭(2.5kg이상)으로 전환하여 부분육 생산 확대

* 국별 출하체중(kg) : 한국 1.5, 일본 2.7, 중국 2.5, 미국 2.1

□ 비료비 : 벼, 채소, 특용작물 등

○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비료 전국 확대 공급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비료비 11% 절감

- 비료대 절감 : ('09) 9,134억원 → ('10.P) 8,090(△1,044)

○ 관행적인 화학비료 사용습관 개선에 사업초기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비료 지원

- 관행 화학비료지원은 중단하고 맞춤형비료 지원으로 적정사용 유도

- 시비효과 홍보 및 우수 지자체 평가를 통한 시상금 지급으로 맞춤형비료 조기정착 유도

◇ 주요 품목별로 조직화·규모화, 시설현대화, 에너지절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경영비 절감대책 추진

- (쌀) 들녘별 경영체 육성 등으로 12년까지 경영비 10%(8,971억원) 절감
 - 들녘별 경영체 1,400개소를 쌀농업 주체로 육성(100ha이상 규모) 하여 쌀 생산의 50%이상 담당
 - 들녘별 경영체 지도자 등 쌀농업 경영 CEO 3천명 육성('12)
 - 농기계임대사업소 350개를 육성하고, 농기계 은행사업에 1조 원을 지원하여 벼농사 농작업 대행비율 확대
 - 농기계임대사업 및 대행비율 : ('09) 134개소/3% → ('12) 350/10

- (한우) 조사료생산기반 조성 등으로 '12년까지 경영비 30%(8,223억원) 절감
 -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, 연중공급체계 구축 및 품질 향상 등을 통해 조사료 급여 확대('09 : 40% → '12 : 60%)
 - 조사료 재배면적 : ('09) 241천ha → ('12) 370
 - 출하 전 초음파 육질 검사를 통한 출하시기 단축(30개월 →27), 번식우 분만간격 단축(15개월 →13), 폐사율 감축 등

- (시설원예)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등으로 12년까지 경영비 20%(5,500억원) 절감
 - 광열동력비 절감을 위해 온실규모·종류·여건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

- 지열(대규모·자동화 온실) : ('09) 91ha → ('12) 857
- 목재펠릿(중·소규모 온실) : ('09) 0ha → ('12) 1,164
- 에너지 절감시설 : ('09) 4,682ha → ('12) 6,964
- * 온실면적('08) : 전체 53천ha, 가온 14천(대규모·자동화 6.3, 중소규모 7.7)

○ 유리·비닐온실 현대화 및 정밀제어 시스템 보급을 통해 인건비 절감 및 생산량 증대

-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지원 : ('09) 145ha → ('12) 1,376
- 자동화 온실 면적 : ('09) 7,508ha → ('12) 9,308
- 정밀제어 시스템 면적 : ('09) 2,668ha → ('12) 3,718

□ (사과) 노동 절감형 재배기술 보급 등으로 '12년까지 경영비 20%(1,029억원) 절감

○ 노동력 절감형 재배기술 보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

- 사과 적화제 사용으로 적과시간 단축 등
- * ('08) 67.4시간/10a → ('12) 47.2(30% 절감)

○ 생산기반정비를 통한 노동효율화 및 농작업 기계화 촉진

- 과수주산단지 등을 대상으로 용수로, 배수로, 경작로 등 정비

□ (넙치) 우량종묘 육성,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 등으로 '12년까지 경영비 20%(788억원) 절감

○ 속성장 육종넙치품종을 당초계획 보다 3년 앞당겨 10년부터 단계적 보급

- * 생산기간 4개월 단축 : ('08) 12~14개월 → ('12) 8~10개월

○ 내병성 육종넙치품종의 조기 개발 및 보급으로 생존율 향상

- * 생존율 20% 향상 : ('08) 60% → ('12) 80%

○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로 사료효율 향상에 의한 경영비 절감

2 농어업 에너지 절감

가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

◇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추진

※ '12년까지 농어업용 에너지 13%(37백억원)절감 ('10년:4.7%, 10백억원)
-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으로 7.3%,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5.7%

(1) 농어업용 에너지 이용 효율화 추진

□ 농어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스템 보급 확대 추진

○ 중·소규모 온실 700ha에 다겹 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

* 에너지 절감율(%) : 열회수형 환기장치(50), 다겹보온커튼(46)

○ 채낚기 어선 217척의 집어등을 LED로 교체(66%절감), 노후어선 저효율 기관 교체(1만마력) 및 근해어선 감척사업(194척) 추진

□ 온실가스 감축 및 유류사용 대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본격 보급

○ 대규모·자동화 온실 250ha에 지열난방 보급, 난방비용 73% 절감

○ 중·소규모 온실 160ha 및 농가주택 4천호에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

<에너지 절감시스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(누적)>

구 분		'09년까지	'10년	'12년	
에너지 절 감 시스템	에너지절감시설(ha)	4,682(33%)	5,382(38)	6,964(50)	
	고효율LED(척)	217(3.2%)	434(6.4)	868(12.9)	
	노후어선 기관교체(마력)	1만(0.6)	2만(1.2)	4만(2.4)	
	근해어선 감척사업(척)	567(15.7%)	761(21.0)	1,280(35.8)	
신재생 에너지	지열난방(ha, 대규모온실)	91(1.4%)	341(5.4)	857(13.6)	
	목재 펠릿	중·소규모온실(ha)	-	160(2.1)	1,164(15.1)
		주택(천호)	3(2.1%)	7(4.9)	39(27.3)

(2) 농림수산식품부 및 관련기관 실천과제

-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조명시설 교체 및 고효율 차량 도입
 - 농식품부 청사,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노후 조명 시설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 : ('09) 20% → ('10) 25 → ('11) 30
 - * LED등은 기존등 대비 약 50%정도 전력 절감, '09년 대비 '11년 전등 사용 전력량 약 7.5% 절감효과
 - * 전등 사용전력량(청사2동 기준) : ('09) 565,408 kwh → ('11)537,138 kwh(5% 절감 예상)
 - 내구연한 도래 차량의 신차 교체시 하이브리드 차량 및 경차 우선 구매('12년까지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50% 보유)
-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, 점심시간 소등, 불필요한 전열기 제거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 실천 등 에너지 절약의 상시화
 - 매주 수요일을 “그린데이”로 지정하여 정시퇴근 시 연간 6,605 kwh 절약 예상(727천원, 본부청사 기준)
 - 점심시간 1시간 소등으로 연간 16,474kwh 절약 예상(1,812천원, 본부청사 기준)
 - 1인 1컵 사용하기 실천, 불가피하게 사용한 종이컵은 회수 재활용
 - 수거한 종이컵은 청사관리소에서 일괄 수거·재활용
 - * 종이컵 회수대 설치완료(본부 : '09.12월, 관련기관 : '10.1월)
- 각 기관·부서별 에너지 지킴이 지정,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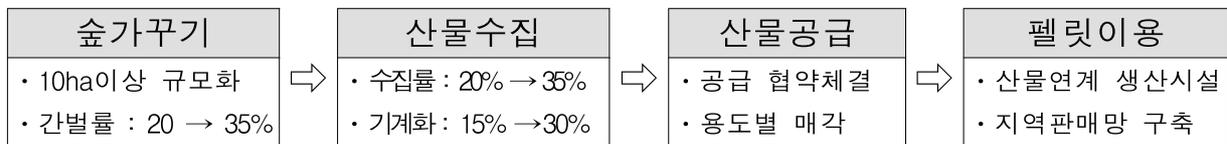
기관명	주요 추진 과제
농진청	○ “그린데이” 지정(수요일), 탄소포인트제(www.cpoint.or.kr) 참여
산림청	○ 화장실 자동점등시설 설치, 절수형 수도 및 소변기 교체
종자원	○ 전기 5%절약, 용수 약 2.4%절약 등 세부계획 수립·추진
서해사무소	○ 에너지절약 추진 위원회의 구성·운영
동해사무소	○ LED 보급, 운항시스템 및 지도·단속방법 개선
농업연수원	○ 고효율 조명기기, 조명 자동제어기 등 우선 설치
수의검역원	○ 절수장치 장착 및 절수의 생활화 지속홍보
농관원	○ 모든 청사 건물에 LED 및 고효율 조명등 설치
식물검역원	○ 식물 격리재배 온실에 블록별 구분 난방 실시 및 가림막 설치
농어촌공사	○ 태양열·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
유통공사	○ 공조시스템 변경으로 제1전시장 전력사용량 20% 절감
한국마사회	○ 매주 수요일 ‘맵시데이’ 두툼한 간소복 착용, 자전거 보급, 태양열 활용

나 목재펠릿 보급 확대

- ◇ 목재펠릿의 화석연료 대체를 확대하여 농산촌 지역의 연료비 절감('12년 789억원)과 온실가스 감축('12년 1백만톤)에 기여
 - 목재펠릿의 연료비는 경유의 56%, 보일러 등유의 82%

- 산림바이오매스 활용, 일관시스템을 구축하여 목재펠릿 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경제성 제고

○ 숲가꾸기의 집단지화, 산물수집의 기계화로 경제성 확보



- 목재펠릿의 체계적인 수급관리

○ 원료와 수요처를 고려, '12년까지 총 40만톤의 생산시설 확충

- '10년 목재펠릿 제조시설 8개소 신설('10년말 총생산능력 年 20만톤)
- * 펠릿제조시설('10년) : 여주, 양평, 포천, 동해, 태백, 정선, 연기, 단양, 청원, 괴산, 화순, 군산, 무주, 김해, 산청, 사천, 거창, 포항 등 18개소

○ 농산촌 난방용 보급에 주력하고, 발전용 수요에 체계적 대응

- 농가주택 펠릿보일러 : ('09) 3 → ('10) 7 → ('12) 39천호
- 시설원예 펠릿 난방 : ('09) - → ('10) 160 → ('12) 1,164ha
- 펠릿혼소발전 시범사업 : ('09) 유동층형 → ('10~'11) 미분탄형

- 목재펠릿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

- 보급초기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펠릿 품질표시 및 보일러 인증
- 부가세 감면 추진, 지역유통망(산림조합) 구축 등으로 이용여건 개선

3 농어가 소득·경영 안정

가 직불제 확충

◇ 공익형 직불제 기본계획 마련 및 시범사업 준비,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상연습 실시

□ 현행 9개 직불제를 공익형 및 경영안정형 2가지 유형으로 통합·확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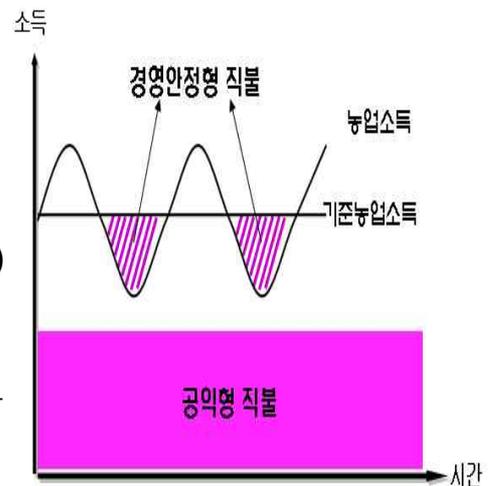
○ 공익형 직불제

: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, 중소농의 기본적 소득보전

○ 경영안정형 직불제(농가단위 소득안정제)

: 주업농의 경영위험 완화

* 시범사업을 거쳐 직불제 통합·확충계획을 확정하고 관련법령 정비



□ 공익형 직불제 기본계획 마련(6월) 및 시범사업 실시

○ 논농업에 한정된 고정직불을 전체농지로 확대하고, 상호준수 의무(Cross compliance) 부과 등 지원요건 강화

* 친환경농업직불제, 조건불리직불제 등은 가산형 직불 형태로 운영

○ '11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 추진

□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상 연습을 통해 본사업 시행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

○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희망농가(약 5,000호)를 대상으로 농가별 농업소득산정 방법 및 소요예산 파악, 프로그램 개발 등

○ 9개 도별 1개 읍·면, 쌀·사과·한우 등 9개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도상연습 실시(6월 ~10월)

* 연도별 대상품목 확대 : ('10) 9개 품목 → ('11) 20 → ('12) 30

□ 공익형직불제 확충과 연계, 경관보전직불제를 개편하여 실질적인 농어촌의 경관보전을 유도

○ 경관보전직불제를 마을경관개선활동 지원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고, '농촌경관계획수립'을 단계적으로 의무화

* (현행) 작물보조금 성격 → (확대) 경관·역사·문화자원 보전활동 포괄지원

* 사업예산 : ('09) 9,640백만원 / 16,171ha → ('10) 15,679 / 16,600

□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의 효율적 개선

○ 조건불리직불금 지원단가를 25% 인상하여 조건불리지역과 일반지역과의 소득격차에 대한 보전 강화

* 지원기준단가 : ('09) 밭 40만원/ha, 초지 20만원/ha → ('10) 50 / 25

○ 마을공동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지원

- 마을별 우수사례집 발행 및 보급(3월), 지자체 담당자 교육 실시(4~6월)

□ 「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」 실시방안 검토

○ 육지생활 중심권에서 8km이상 떨어진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하되, 공익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

○ 어가단위 소득안정제는 어업경영체 등록('10 -'11년)이후 검토

나 농어가의 경영회생 지원 확대

- ◇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상환 등 농어가의 자구노력을 중점 지원
 -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획일적 부채경감 대책은 지양

□ '08년말 기준 농어가 부채 규모는 33.6조원으로 추정(통계청)

- 농가부채 총 규모는 31.2조원이며, 호당 평균 25,786천원으로 '07말(29,946천원) 대비 4,160천원 감소*(△13.9%)

* 농가부채가 감소한 것은 통계청 표본개편에 따른 시계열 단층현상으로 파악

- 어가부채 총 규모는 2.4조원, 호당 평균 33,587천원 수준

□ 소규모 농가 등 더 많은 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요건 개선 및 예산 지원 확대

-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기준 완화(4천만원 이상 → 3) 및 부채 대비 지원배수 조정(부채규모의 1.2배 지원 → 1배)

- 농지 외에 농업용 시설(축사, 고정식온실 등)까지 매입 확대

- 신청자의 부동산·금융자산 확인을 강화하여 사치성 자산 보유자 지원 제외 등 적격 대상자 선정·지원

* 사업예산 : ('09) 1,700억원 → ('10) 2,300(증 600)

□ 농어가의 기존 채무를 장기 저리(3%, 3년 거치 7년 분할)자금으로 대체하는 농수산경영회생자금 확대('09 : 400억원 → '10 : 600)

다 재해대비 경영안정장치 강화

◇ 상해, 자연재해 등 농어업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위험관리 체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영어·영농 기반 마련

□ 재해보험 대상품목·대상재해·적용범위 확대

- 농작물(5), 축산물(1), 수산물(1) 대상품목 확대('09 : 34 → '10 : 41)
- 자연재해 및 병충해, 조수해(鳥獸害)를 대상재해에 포함하고 보험대상을 농어업용 시설물(비닐온실, 축사)까지 전면 확대
 - * 「농작물재해보험법」과 「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」을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으로 통합 개정('10.1월 시행)

□ 재해보험 및 공제의 실효성 제고

- 보험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, 보험홍보 강화 등 재해보험 가입을 제고(농작물, '09 : 31.4% → '10목표: 32.5%)
- 농작업 중 상해사고에 대비, 고용주가 가입하는 농작업 근로자 상해보장공제 시범지역 확대('09 : 9개소 → '11 : 25개소)
- 재해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상수준 확대 및 상품개발 지속
 - 보상수준을 '14년까지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(60→100백만원)
- 어선원 보험 단체가입시 인센티브를 제공, 소형어선 가입률 제고

□ 적조 발생 대비를 통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 추진

- 적조피해 발생 직전 어류 방류사업 신규 추진('10, 300백만원)
 - 지속적 질병관리 및 환경 수용력 등을 고려한 분산방류 추진
- 선박 및 항공기를 이용, 적조발생 우려해역 중심으로 예찰 강화
 - 광역예찰(월 2회) 및 지자체 중심 연안예찰(매일) 실시

라 농기계임대사업 확대

◇ 농작업 대행을 확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농작업을 개발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임대사업 정착

□ 밭농사용 임대사업소(정부) 확대설치로 기계화율 향상

○ 정식·수확작업 등 기계화가 낮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기계화율 제고

* 농작업별 기계화율 : 경운·정지 96%, 파종·이식 11, 비닐피복 22, 방제 90, 수확 8

○ 시·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50개(250억원) 추가 설치('10, 184개소)

- 기종 다양화 및 충분한 수량 확보로 임대수요 변화에 대응

□ 벼농사용 임대사업(농협)은 파종에서 수확후 관리 작업까지 One-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

○ '10년부터 매입 농기계와 신규농기계로 임대사업 활성화

- 신규 농기계 구입 : ('10) 750억원 → ('11) 750 → ('12) 500

* 중고농기계 매입완료('09) : 15.7천대, 3,000억원

○ 농작업 직영조합을 적극 육성하여 농작업 대행을 확대

* 직영조합 : ('09) 16개 조합 → ('10) 40 → ('12) 200 → ('14) 300

- 농작업은 '09년 벼 재배면적의 3%에서 '10년 6%까지 확대

* 농작업 면적 : ('09) 28천ha → ('10) 56 → ('12) 95(벼 재배면적의 10%)

○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로 사업 정착

* 경운·정지, 이앙, 수확 중심 → 방제, 육묘, 파종, 건조 등 일관작업 체계 구축

4 농식품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혁

가 농식품 수급안정

◇ 민간의 자율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, 시장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혁신으로 농식품 수급을 안정

- 농식품 가격 등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동향 점검, 선제적 대응
 -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 농식품 50품목 중점 점검·관리
 - * 농산물(10), 축산물(4), 수산물(3), 가공식품(30), 외식메뉴(3) 동향 주기적 점검
 - 원자재 가격과 가공식품 가격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물가인상을 최소화

- 농어업 관측을 고도화·정밀화하여 재배면적 조정 등 활용도 제고
 - 관측대상 품목을 확대하고, 가격 급등락이 큰 6개 품목에 대해 3~6개월 이후의 정보를 제공하는 선행관측 도입(1월)
 - * 관측품목 확대 2품목(버섯, 오리), 선행관측 6품목(무, 배추, 양파, 파, 돼지고기, 닭고기)
 - 인공위성을 활용한 농업관측 시범사업 전개
 - 벼를 대상으로 작황 및 수확예상량 등 원격관측
 - 도·소매가격 조기에보지수 개발(1월) 등 조기에보시스템 구축(3월)
 - * 조기에보지수 : 정상-관심-주의-경계-심각 등 5단계로 구분 예보

- 계약재배와 자조금 운영 내실화로 민간 자율 수급조절 기능 강화
 - 가격 등락이 심한 채소·과실(17개 품목*)을 대상으로 소비량의 10% 수준 물량을 계약재배('10년 : 1조 280억원)
 - * 채소 13(무배추, 고추, 미늘, 양파, 파, 당근, 감자, 오이, 호박, 풋고추, 토마토, 가지), 과일 4(사과, 배, 단감, 감귤)

○ 28개 품목별 대표조직의 기능을 확대, 수급조절 및 시장 대응 능력 강화

- 출하량 급증시 품목별 대표조직이 회원간 유통협약을 통해 수급관리
- * (사례) '09년 감귤 공급과잉(약 6만톤) 관측결과에 따라 저급품 출하 금지 협약 추진

○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촉진 홍보로 농수산물 수요 확대

- * 자조금 지원예산('10) : 원예작물 29품목/85억원, 축산물 9/262, 수산물 5/17

□ 수매·비축사업을 통해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

○ 공공비축미, 수매·비축 농수산물*을 탄력적으로 공급

- * 11개 품목 : 농산물 8(고추·마늘·양파·생강·참깨·땅콩·콩·팥), 수산물 3(오징어·고등어·명태)

○ 할당·조정관세, 시장접근물량 등을 신축적으로 운영

□ 제도개선, 국내소비·수출확대 등을 통해 축산물 수급안정 도모

○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전국 쿼터제 도입

- 현행 집유 주체별 쿼터관리 체계를 유지하되, (가칭)'중앙낙농위원회'를 통해 전국 생산량 및 쿼터량을 종합 관리
- * 중앙낙농위원회 설립을 위한 「낙농진흥법」 개정 추진(4월~)

○ 우유 신제품 개발 및 급식 확대 등 소비촉진대책 추진

- 잉여원유(20만톤/년)를 가공원료유로 공급, 고품질 치즈 등 생산 확대
- 노인층 소비확대 등을 위해 기능성 강화 제품 개발 지원(126억원)
- 목장형 유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직판쿼터제 도입(12월)

○ 돼지고기·닭고기 부위별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출 확대

- 국내 선호도가 낮은 저지방 부위 수출 확대를 위해 도축·가공장 위생시설 개선 지원(1,100억원)

나 유통구조 개혁

◇ 소비지·산지간 직접거래 활성화, 유통주체간 경쟁촉진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유통시스템 구축

□ 농산물은 복잡한 유통단계, 짧은 저장기간 등으로 높은 유통비용 발생

○ 해남 월동배추 유통비용('09.4) : 84%(물류비용 등 49, 이윤 35)

* 품목별 평균 유통비용 비율 : 잎채소 71%, 과일 54, 곡물 27

○ 선진국도 채소류 유통비용이 높으나(미국 73%, 일본 68), 저운 유통 등 유통의 질에서 차이

□ 소비지와 산지간 직접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비용 절감

○ 바로마켓·고속도로 휴게소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직거래 장터 확충

* 바로마켓 매출액(80개 업체, 주2일) : ('09) 51억원 → ('10) 80억원

○ 대형유통업체와 산지조직간 직거래를 위한 자금 지원

○ 사이버거래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B2B 거래 정착

* 사이버거래소 B2B 거래액 : ('09) 30억원 → ('10) 1,000억원

□ 전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대규모 물량 취급이 가능한 농산물 판매회사를 설립하여 산지·소비지를 수직 계열화

○ 생산자 단체 주도의 전국단위 유통회사를 단계적으로 설립

* 농협의 신경분리와 연계하여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

○ 소비지 물류기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인근에 농협물류기지 건설 추진

□ 소매유통 대형화 등에 대응하여 생산자 조직화·규모화

○ 산지유통활성화·계약재배사업 등 산지유통 자금을 통합

- 산지유통 관련 사업·자금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(6월)

* 유통조직중심 지원, 생산자 - 정부간 매칭펀드 방식 등 도입 검토

○ 시군유통회사 운영 활성화 및 기존 산지조직과의 협력강화 지원

- 현물출자 허용, 영농조합법인·농협 등 산지유통조직 출자 확대

○ 생산자가 판매까지 공동 책임지는 수탁형 공동계산제 활성화

□ 농수산물 유통시설 개보수·현대화 등을 통해 유통 효율성 제고

○ 저온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유통의 질 개선

* 저온저장비율 : ('09) 19% → ('15) 30%

○ RPC(쌀), APC(청과), LPC(축산) 등에 대해 평가를 통해, 구조 조정·통합·가동율 제고 추진

○ 도매시장 반입비용 절감을 위한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산지 직배송 시범사업 실시

○ 도매시장 시설현대화, 위탁관리 등으로 물류·유통 효율화

* '10년 시설현대화 사업대상 : 서울 가락, 광주 각화, 대전 오정

□ 도매법인·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유통주체간 경쟁 촉진

○ 도매시장법인(121개, '09년기준) 평가를 강화, 규모화 및 경쟁 촉진

○ 도매법인 판매장려금 차등지급 등을 통해 중도매인의 규모화 추진

2. 체질개선 · 미래준비

1 녹색 성장 및 농식품 R&D 혁신

가 저탄소 녹색산업 추진

◇ 농식품산업을 저탄소·저투입·고효율 녹색산업으로 전환

- 농림수산물분야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 준비,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

* 농업분야는 국가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.5%(1,510만tCO₂) 수준, 산림 분야는 6%(3,600만tCO₂) 흡수

□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(2020년 BAU 대비 30% 감축)에 따라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 및 감축방안 모색

- 농식품 분야별 온실가스 산정 등을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('10~'13)
- 기업 및 산업체가 산림 조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상쇄할 수 있는 산림탄소상쇄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(4월~12월)
-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술 개발
 - 맞춤형 비료 공급 등 질소 시비량 저감 기술
 - * 맞춤형 비료 지원시 약 163천tCO₂ 감축 추정('10)
 - 반추동물 장내발효 및 가축분뇨 처리과정의 메탄발생 저감기술 개발
 - * 저메탄 발생 사료첨가제 급여로 14.8~27% 저감

□ 농산어촌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를 통해 화석연료 대체

- '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중단에 대비, 가축분뇨 자원화·에너지화 시설 확충('09 : 39개소 → '10 : 59)
- 비식용 농작물, 해조류 등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
 - 비식용 바이오매스 농작물 품종개발('09~'12) 및 시험재배('13~'18)
 - 연안에 대규모 바다숲 조성('10년 250ha, '19년까지 35천ha)

○ 목재펠릿 등 원료공급을 위한 **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**

- * 숲가꾸기/산물수집(누계) : ('09) 25만ha/80만m³ → ('10) 48/190 → ('13) 125/650
- * 바이오순환림 조성 : ('09) 1,663ha → ('10) 6,000ha

□ 바이오매스·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**에너지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조성('10~'12)**

-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(1개소), 산림탄소순환마을(1개소) 시범조성
- * 저탄소 녹색마을 기본설계 추진(3월~12월)

□ **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고효율 에너지 장비 보급 확대**

○ **녹색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투자 활성화**

- * 녹색기술인증고시(안)에 '친환경농식품' 등 7분야 42품목, 녹색사업(프로젝트) 고시(안)에 '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·공급사업' 등 3분야 12대상사업 포함

○ 어선 유류비 절감을 위해 **LED집어등 설치(217척), 유류절감장치(200척) 지원 및 자체연료 이용 전기 추진시스템 등 개발·보급**

- * LED 집어등으로 교체시 척당 연 17백만원(오징어채낚기), 유류절감장치 설치시 80백만원(트롤어선) 절감 가능

□ **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선제적 대응기술 개발**

○ **작물 재배적지 변동 영향평가 및 돌발병해충 등 대응체계 구축**

- * 기후변화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영향 분석('09~'11)

○ **재해 적응성 품종 및 온난화 적응 아열대 신소득 작물 개발**

- 신종 병해충 대응품종, 생태·고온적응성 품종, 아열대 작물 유망 품종(망고, 오크라 등) 개발

- * 재해적응성·고품질 품종 : ('09)12종 → ('10)13 → ('12)15

- * 아열대 작물 도입·평가(누계) : ('09)5종 → ('10)10 → ('12)20

나 농식품 R&D 효율성·투명성 제고

- ◇ R&D 기획·관리·평가 관련 운영 시스템 혁신 및 녹색·생명산업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범부처 참여의 중장기 사업 기획
 - * 수요자중심의 R&D 기획·평가 시스템 도입, 산업분야(7대)별 기술개발로드맵 수립

- 개편된 농식품 R&D 체제의 운영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에 중점
 - 현장 맞춤형 R&D 확대를 위해 Web 기반형 통합 기술 DB 구축 및 『품목별 기술협의회』 운영
 - 부·청의 연구개발사업(특정 사업·기술군)에 대한 심층평가제도를 신설하고, 평가결과를 차기년도 재원계획에 반영
 - 민간 R&D 기반 조성 및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 프로그램 개발
 - 기술혁신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, 기술신용보증, 연구성과 인센티브 등
 - 부·청 R&D 사업(공모과제)의 과제관리를 점진적으로 전문관리 기구로 통합하여 중복 방지
 - 관계 기관간 R&D 중복사업 조정 ‘실무협의’ 상설화 및 ‘농과위’ 총괄·심의 기능 강화
-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확충 등 미래수요를 고려한 투자확대 (05~09년 : 3.0조원 → 10~14년 : 5.9조원)
 - 기후변화대응·에너지 등 녹색성장 지속 지원(10년 : 1,105억원)
 - * LED 응용 에너지절감 시설·어선, 바이오매스 자원화, 돌발 병해충 대응
 - IBNT 첨단기술 융복합으로 생산현장의 첨단화기술 확보(10년 : 315억원)
 - * 지능형 첨단온실, 유비쿼터스 농림어업정보시스템, 유해물질자동제거기술
 - 한식세계화, 외해양식, 검역 등 고부가 글로벌 상품화 기술(10년 : 917억원)

2 종자·생명산업 육성

가 종자산업

- ◇ 종자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
 - 육종 인프라 구축, 수출시장 개척으로 '20년까지 수출 2억\$ 달성
 - * 종자시장 규모 : (세계) 83조원, (국내) 1조 2천억원

□ 종자산업 R&D 투자 집중 및 관련 연구 통합조정

- 분야별(농업, 축산, 수산, 산림) R&D 기획·조정 등 종합계획 수립, 추진
 - * 분자유종, 수출전용·수입대체 품종개발, 해조류 신품종 등 중점분야 투자 집중
 - * ('09) 542억원 → ('10) 600 → ('15) 917 → ('20) 1,430('09대비 2.6배)

□ 민간의 품종육성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지원

- 농촌진흥청(농업기술실용화재단)에 「육종기술지원센터」를 설립(9월), 선행기술서비스, 시험장비 공동이용 등 민간 품종개발 지원
- 「방사선돌연변이육종센터」를 설립, 방사선 육종 체계화
 - * 기본·실시 설계('10), 센터 설립(~'12) 후 육종연구 체계화('13)
- 「민간육종연구단지」를 조성, 연구실 및 실험장비를 민간에 임대하여 중소규모 종자업체의 육종기반 마련
 - * 연구용역('10) 후 시설공사 등 사업 추진('11~'13), 업체 입주('14~'15)
- 분야별 육종인력 양성 및 특화대학 지정·운영 추진

□ 농림수산 유전자원 활용을 통한 종자산업 활성화 지원

- 유전자원 수집·보전·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
 - * 유전자원 수집확대 : ('08) 206천점 → ('10) 225 → ('12) 234
 - * 3년간('10~'12) 총 70억원을 투입, 식량작물 등 114천점 증식

나 종축·수산종묘산업

- ◇ 우수 종축·종묘 공급 확대로 생산성 향상, 농어가 소득 증대
- 수입의존성이 높은 종축·종묘의 유전자원 자립기반 구축

□ 종축산업 활성화대책 세부추진계획 수립·추진(1월~)

- 우수 씨수소 선발강도 강화 및 우량 암소집단 구축
 -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해 한우 검정두수 확대('09: 400두 → '10: 500), 젖소 청정육종농가(우량 암소집단) 육성('09: 5호 → '12: 20)
 - * 한국형 젖소 정액 시장점유율 확대('09: 50% → '17: 70)
 - 시·군단위 한우사업단과 연계한 암소개량사업 신규 추진(10개소), 수정란 생산·공급을 위한 고능력 암소개량센터 조성 추진('10~'12)
- 우수 종축시설 인증제 도입 등으로 전문화·청정화 유도
 - 평가결과 우수 종돈장·종계장에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
 - * 인증제 제도화를 위한 축산법 개정(1월) 및 세부평가기준 마련(2월)
 - 무병·우수 새끼돼지 공급을 위한 전문원종돈장 시범육성(50억원)
- 한국형 종축 선발체계 구축으로 유전자원 자립기반 구축
 - 한국형 종돈 개발을 위해 종돈장간 네트워크 확대(5개소 → 7)
 - 국산 종오리 개발 추진(6월~), 원종오리장 1개소 육성(12월)

□ '12년 수산품종보호권 설정에 대비, 제도정비 및 품종개발

- 수산종묘 품종보호를 위해 종자산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
- 양식기술이 확립된 품종을 중심으로 수산품종개발 및 국산화율 제고
 - * 신품종 개발 : ('09) 김4, 넙치1 → ('12) 김6, 미역3, 넙치1, 전복1, 수산관상생물2
 - * 김/미역 국산화율 : ('09) 65% / 85% → ('15) 90 / 95
- 수산관상생물산업 육성 등으로 수산종묘 수출기반 확충
 - * (가칭)수산관상생물산업법 제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('10)

다 동·식물자원의 산업화

◇ 미생물·동식물 등 유전자원 DB구축으로 생명산업 정보기반 마련, 동·식물자원에 기반한 생명공학 연구 및 산업화 추진

* 애완·관상용 동식물시장규모 : ('08) 1.6조원 → ('15) 4조원, 수출 1억달러

□ 동·식물 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관련법규 및 제도마련

○ 「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 및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(9월)

- 곤충산업의 증장기투자계획, 기술교육·전문인력육성, 연구개발 등

* 애완동물시장 ('08) : 우리나라 1조원, 미국 50조원, 일본 12조원

○ 생산의 규모화 및 전문농가 육성, 품종개량을 통한 수출상품개발 지원 등

□ 농림어업, 연구소·대학·행정기관 등 분야별,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미생물, 동식물 자원 등을 통합하여 생명자원 DB구축('10~'12)

○ 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정보의 표준화

○ 각 관리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요자에게 정보제공

□ 동식물자원에서 기능성 물질 개발 등 생명공학 연구 강화('10 : 504억원)

○ 기존의 품종개량·동물치료 뿐만 아니라 기능성물질, 바이오 에너지 소재 분야까지 연구범위 확대 및 산업화 추진

- 약용작물, 곤충 등으로부터 기능성 소재 개발('09 : 10종 → '12 : 15)

* 감귤 (인공피부 소재용 겔), 곤충 (항생물질), 실크 (인공 뼈) 등

- 바이오 신약 생산 기축(2종) 개발, 장기이식용 돼지(1종) 생산('12년까지)

* 백혈구증식인자생산용 형질전환 돼지, 장기이식용 형질전환 돼지

3 농정추진체계 개편

가 협동조합 개혁

(1) 농협 개혁

◇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조속 마무리하고,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 본격 추진

- 농협법 개정 등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차질없이 추진
 - 중앙회 사업 분리 및 독립법인화(연합회, 경제지주, 금융지주)를 주요 내용으로 농협법을 개정(2월 임시국회)
 - 법 공포 1년 후 시행을 목표로 자산실사, 법인별 인력 및 조직 개편 방안 마련, 자본금 조달 등 후속작업 시행
 - 관련 연구용역 진행 및 농민단체, 중앙회, 조합,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업구조개편 준비위원회 운영
 -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·세제 등 정부 지원방안 마련
- 운영구조개선 및 사업구조개편이 농업인 실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사업 활성화 본격 추진
 - 중앙회의 수익성 경제사업을 분리, 지주회사 - 자회사 체제로 개편
 - 조합공동법인, 연합사업단, 품목조합 등 산지 광역조직 육성 및 지원
 - 도매기능 확충 및 유통채널 다각화 등 소비지에서의 농협 역할 강화

(2) 수협 선진화

◇ 수협법 개정 등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영을 조기 정상화하고 어업인을 위해 제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전환

* 수협법 개정안 국회 농식품위 계류 중('09.4월 국회 제출)

□ 중앙회장 및 부실조합장 비상임화 등 운영구조 개편을 위한 수협법 개정(2월)

○ (중앙회) 중앙회장 비상임화 및 지도·경제사업 통합, 인사추천위원회 설치, 이사회 기능강화 등 전문경영인체제 확립

○ (일선수협) 부실수협 조합장 비상임 및 간선제 선출, 임원자격 기준 강화, 이용고 우선배당 등

□ 지속적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효율 극대화 추진

○ 중앙회 인력·조직 감축, 부실사업장 폐쇄 등 구조조정 추진
- 조직·인력 10% 축소, 판매기능 자회사 이관 및 급여체계 개편 등

○ 부실수협(4개)은 '11년까지 단계적 통폐합하고, 부실우려 수협(10개)은 자금지원 및 MOU체결로 고강도 경영개선 목표 부여(5월)

* 완도군수협 계약이전('09.1월) 및 흑산도수협 합병명령('09.10월)으로 통폐합 추진 중

○ 일선수협 상호금융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분리 전환 검토
- 부실수협부터 정책자금 중앙회 이관 및 상호금융 건전조합과 통합 등

□ 공적자금(1조 1,581억원)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 자산매각 등 수협 자구노력 강화

○ 장기적으로 수협 신용부문을 자회사로 분리, 특수은행으로 육성

(3) 산림조합의 건전한 육성

◇ 부실조합의 경영개선으로 조기에 정상화하고, 투명경영 및 경영지도 활성화

□ 부실 또는 부실우려 조합의 효율적 경영개선

- 부실이 심한 조합(순자본비율 Δ 15%미만)의 합병 등 구조조정
-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부실 우려조합(순자본비율 Δ 15%~2%)은 경영개선 이행 약정 체결 후 경영개선자금 지원 및 목표 부여
 - 부실조합 구조개선 계획 수립(4월) 및 경영개선 이행 방안 마련(6월)
-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경영개선 이행 상황 지도·점검 및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

□ 투명한 경영문화 정착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

- 사건·사고 조합은 산림경영지도 예산 차등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
- 조합의 클린센터 연계망 구축 및 내부공익신고제 등 확대
 - 사건·사고 유형별 사례 제작 및 내부공익신고제 규정 마련(3월)

□ 산주·임업인에 대한 경영지도 활성화

- 산림버섯 신제품 개발보급, 조합특화 사업 확대 및 목재 펠릿 공급 선도기관 역할 강화
- 산림경영지도 사업평가를 통한 우수조합 지원확대 및 인센티브 지급 등 경쟁체제 도입
 - 지도사업 평가 지침 마련(6월) 및 인센티브 지원 계획 수립(10월)

나 창조적인 경영주체 육성

(1) 미래 농어업 핵심인력 육성체계 개편

- ◇ 창업자금에 국한된 후계농어업인 지원을 교육·컨설팅·복지 등 종합적인 「창업농어업인 육성사업」으로 전환
- ◇ 가업승계 농어업인을 선발, 영농·영어승계를 획기적으로 지원해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어촌 사회의 리더로 양성

□ 정예 인력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가 선발되도록 기준 개선

-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토록 교육, 컨설팅, 멘토링, 기술, 창업자금, 주거·양육비 등 종합 지원지침 시행(4월)
* 창업농어업인 선정 후 7년 경과시 창업농어업인 육성사업 졸업 제도 도입
- 기존 후계농·우수농어업인 지원자금을 통합하고 절차 간소화
- 장기적으로 담보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중심으로 전환 추진

□ '10~'12년간 각 100명의 가업승계 인력을 선발하고 점진 확대

- 경영진단·평가, 승계준비 교육·컨설팅을 거쳐 최종 선발
- 농수산 고교·대학 졸업생, 귀농·귀어인, 전문농어업인 우대
* 개념 : 경영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·증여를 통해 소유권·경영권 이전
- (가칭) 「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센터」 설치, 대상자 평가·선발, 교육, 컨설팅 제공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·운영(6월)
- 가업승계 교육과정을 개설, 경영, 기술, 법무, IT 등 교육
- 법률·재정 컨설팅 지원, 상속세·증여세 등 세제혜택 확대 추진



(2) 교육·경영컨설팅 체계 정비

- ◇ 농어업 선진화를 이끌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예인력 육성
 - 경쟁원칙 강화, 전문 실습교육 확대, 교육기반 지속 확충
- ◇ 컨설팅은 농어가 중심에서 조직·법인 경영컨설팅으로 개편

□ 농어업교육 추진체계를 효율화하고 농정목표와 부합하는 교육수행 기능 강화

- 교육기본계획(3년 주기)을 수립하고 기관간 역할분담 명확화
- 교육과정 개설에 공모를 통한 경쟁원리 도입(공모비율 : '09년 15% → '10년 30%) 및 교육비 자부담을 30% 이상으로 확대
- 교육과정 개발·인증·평가 등 교육지원 S/W 강화

□ 미래세대 정예인력 양성 강화

- 한국농수산대학은 수산·임업·식품분야 등 농식품 전분야 정예인력 양성의 세계적 요람으로 육성(어업과 개설)
 - 가업승계, 창업 활성화를 위해 「자금-교육-컨설팅」 연계 지원
- 농대생 대상 후계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농고생 대상 현장 훈련, 진학우대(한농대 진학비율 확대 : '09년 20% → '10년 22%)

□ 현장 수요에 맞춰 컨설팅 사업을 규모별로 운영하되, 개별 농어가 사업량은 축소하고 조직·법인단위 사업 비중 확대

- 농가단위 사업비중을 60% 이하로 축소하고 조직단위 사업 비중을 40% 이상으로 확대(대규모 조직 50개소 수준)
 - * '11년부터는 조직경영체 컨설팅 비중을 50% 이상으로 확대
- 농어가 컨설팅은 비용절감을 통한 소득증대에 주력하고, 조직·법인 컨설팅은 기업화 촉진 경영·전략 분야 특화
- 사업점검·평가 기관을 별도 지정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

다 귀농·귀어대책 본격 추진

◇ 귀농·귀어 희망자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, 교육, 컨설팅 제공 등 귀농귀어 대책 본격 추진

- 귀농·귀어 준비부터 정착까지 관련 정보·교육 등의 일괄 제공을 위해 귀농·귀촌종합센터(농협·수협) 연중 운영
 - 귀농·귀어종합센터(농협, 수협)에서 이주희망자의 수요에 따라 유형별·지역별 맞춤형 정보 제공, 상담 실시
 - * 귀농귀촌 정보시스템(www.returnfarm.com) 구축, 상담센터 운영(1577-9597)
- 귀농·귀어 희망자에게 다가가는 생활공감 정책 추진(3월)
 - 지자체,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농지, 빈집, 지자체 귀농시책 등 정보를 종합 제공(KBS, 「5천만의 아이디어」 채택)
 - 온라인·전화 등을 활용한 상담 서비스 확대
- 귀농·귀어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어업 창업교육과정 운영(3월)
 - 생산기술부터 경영까지 실습 중심형 합숙과정(3~4개월) 운영
 - * 천안연암대(원예, 가공 등), 여주농전(과수), 농촌진흥청(버섯, 약용작물 등)
 - 전문교육기관을 공모, 3~4주 과정 귀농·귀어교육과정 운영
 - 농어업 인턴제를 활용, 기술 습득 및 일자리 지원(300명)
- 귀농·귀어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영농·영어자금 등 지원
 - 농지구입, 시설설치, 주택신축 등을 위한 융자 지원(1,000억)
 - * 후계농어업인과 동일 조건(1천만원~2억원, 연리 3%, 5년 거치 10년 상환)
 -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여 수리 시 수리비 보조(1,500호)

라 농지·산지관리 합리화

◇ 여건변화에 맞게 농림업 구조를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농지·산지 규제를 완화하고, 농지매입비축 등 새로운 제도 도입

(1) 농지 이용 효율화

□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농지 이용 효율화

- 평균경사율이 15% 이상인 농지 중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「영농여건불리농지」를 지정
 - 읍·면의 집단화 규모 2ha미만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(6월까지) 후 지정
 -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거래를 자유화하고, 신고만으로 농지전용 허용
 - *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소유·임대차 제한 폐지, 전용 제한 완화('09.11.28 농지법 개정)
-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과 안정적 은퇴 지원을 위한 「농지연금제도」 도입 준비
 - 고령농 사망시 농지를 전업농에 매도, 전업농 육성 및 영농 규모화
 - '11년 시행을 위해 상품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('10년 22억원)
- 농지시장 안정 및 구조개선을 위한 「농지매입·비축사업」 시행
 - 이농·은퇴 농가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('10년 750억원), 창업농 등에 임대
 - 엄격한 토지이용 제한으로 가격하락이 큰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 매입
- 농지은행 활성화를 통한 임차인 보호 및 농업경영체 지원
 - 음성적 임대차를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로 전환, 임차인 보호
 - *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시에는 임대기간(5년) 및 연장, 임대료 결정, 임대차 계약 체결, 계약의 해지 등이 정형화되어 있어 임차인 보호에 유리
 - 농지은행 보유농지를 활용, 규모화 된 경영체의 농지이용 지원

(2) 산지 제도 합리화

□ 산지구제 합리화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및 경제위기 극복

○ 보전산지의 중복규제 완화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

- 보전산지의 중복규제 폐지 및 진입로 개설 허용

* 상수원보호·문화재보호 등을 위해 지정된 보전산지의 경우 「산지관리법」의 행위제한 대신 「수도법」·「문화재보호법」 등 개별법상 행위제한만 적용

- 사업부지에 준보전산지가 80%이상인 경우 보전산지 행위제한 완화

○ 장기간 타용도 이용 산지의 한시적 지목변경 허용

-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 지목변경 허용

○ 수도권에 속하는 준보전산지에 시설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한시적('11.6.30까지) 부과 유예

□ 중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산지이용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산림강국 육성을 뒷받침

○ 계획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관리 기본계획제도 도입

○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산지전용의 적합성·환경성 등을 사전에 조사·검토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

□ 토석채취지 등 훼손산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 마련

○ 산지복구공사 감리제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제도 신규 도입

- 부실복구 방지를 위해 감리제도를 도입하고, 식물생육에 적합한 토석으로 복구토록 규정

○ 지하채굴 기준, 다수업체 채석단지 운영규정 등 정비

마 농정 거버넌스 선진화 및 농어가 고충해소

(1) 가칭 ‘농어업회의소’ 설립 지원

◇ 농어업계 의견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, 신뢰 있는 정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(가칭)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지원

○ 상반기에 3-4개 지역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단계적 확대

□ 농어업인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대표조직 구성

○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농어업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업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 부여

* (사례) 프랑스 ‘농업회의소’의 ‘지도’ 역할은 ‘농업인교류센터’에서 담당
- 농업인교류센터 : 세무·노무 등 전문분야에 대해 상담 및 지도 역할

□ 우선, 상향식 접근방식을 통해 시군단위 시범사업으로 추진

* 고창, 의령, 부여 등 공동사업이 활성화된 시·군부터 우선 추진

○ 사전에 농어업인 단체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청취 후 지역 농어업회의소 설립 계획을 수립(3월)

○ 정부·지자체는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 컨설팅·교육 지원

○ 조직운영비는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등 재정 독립성 유지
- 희망 지자체와 회의소 설립 추진을 위한 MOU체결 추진

□ 하반기에는 광역·전국단위 회의소 설립 준비 작업 추진

○ 지역회의소 추진 상황 평가, 농어업인단체 의견수렴(10월)

○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법 제정 여부에 대한 여론 수렴 등

(2) 농어업인 불만처리 강화

- ◇ 농어업 분야 민원·피해 등의 종합 상담·처리·정책화 시스템 구축
- ◇ 현장 농어업인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농어업인 고충사항 해결

□ 민원처리 총괄 팀 설치 및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(6월)

- 농어업인의 주요 고충 사항인 정책자금 대출, 농기자재 분쟁, 대형유통업체와의 공정거래 분쟁 등의 제도적 처리방안 마련
- 통합 콜 관리시스템(고객상담센터)을 구축, 민원 1차 처리비율 향상

□ 민·관 네트워크와 연계, 농어업인 고충해소방안 마련 추진

- 정책자금 대출 : 농식품부, 농수협, 농신보 등으로 협의회 구성, 대출애로 해소
- 농기자재 분쟁 : 관련기업, 생산자단체, 법률전문가 등으로 분쟁 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, 운영
- 불공정 거래 :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조사 후 공정위에 조사의뢰
- 현장 민원 : 농어업인교류센터, 한국소비자원 등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농어업인의 애로사항을 발굴, 해소 방안 강구

* 농어업인 교류센터 : 농어업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민원, 고충을 발굴·해소하는 소통 창구로서 농업인회관이 설치된 도(8개소)에 설립('09~)

□ 민원·건의 등의 처리결과를 평가, 정책화시스템 구축

4 수산업 재도약 기반 구축

◇ 어업구조 개편, 어장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 조성 강화로 안정적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

- 제도 및 시스템을 혁신하는 『新 수산 30대 프로젝트』 추진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

□ 어업 구조조정 시스템의 혁신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

- 적정 어선세력으로 감축하기 위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법·제도 개선
- 원양어선 신규건조('10년 3척, '16년까지 40척)로 원양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조선산업 육성

* 원양·조선업계 합동 설계연구회 신설(1월), 농수산식품 모태펀드로 선박금융 지원

□ 지역실정에 맞는 어업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안어업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위임, 해양환경 변화에 신속적 대응

- 수산업법 등 제도개선 및 연안어업 표준관리규정 제정(9월)
- 그물·어구어법 등에 관한 지역별·업종별 어업분쟁은 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('09.10월 설치)”를 통해 원만히 해결

□ 대규모 외해 양식산업 등 신 성장동력 기반 구축

- 내만 가두리 중심 양식을 고부가 신품종 위주의 외해양식으로 전환
 -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연안에 출현하는 참다랑어를 어획·양식하는 기술 개발 및 제도 마련(6월)

* 내만가두리 양식장 면허면적의 30%(352ha)를 외해로 이설('11년:100ha, '12:125, '13 :127)

- 친환경 갯벌양식어업을 서해안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고, 개체굴·해삼 등 전략품목 개발(10년 연구용역 실시)
- 국제포경위원회(IWC)의 변화(보존 → 이용)에 대응, 포경제도 부활(4월)
- 생태계 기반 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
 - 대규모 바다숲 조성(250ha) 및 해조류 바이오매스의 통합적 활용(에너지, 신소재 등) 추진
- 낙후된 수산물 유통시설을 현대화하여 위생여건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수산 가공식품 개발 및 수산물 브랜드 육성
 -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(12월 착공), 위판·공판장 등 산지시설 개선(15개소) 및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추진
 - 산지가공시설 지원(279억원), 수산물 대표 브랜드(12년 30개) 육성
- 수산 거버넌스의 전면적 개편으로 미래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
 - 지구온난화 등 해양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산 관리기능 전면 개편
 - 국립수산과학원 구조조정과 연계, “수산자원조성 전문법인” 설립
 - * 「수산자원관리법」 개정으로 법적근거 마련(1월), 법인 출범(9월)
 - 어업지도사무소를 동·서·남해 해역별체제로 개편, 서비스 강화
 -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으로 논 생태양식 창업지원 확대(10년 실시설계)
 - 신규인력 진입을 위해 어촌계 정관 등 제도를 개선하고(8월), 마을어업회사 창업을 통한 어촌관광 진흥 추진
 - * 마을어업회사 : 어촌관광을 중심으로 수산물 생산·가공·유통 등을 아우르는 지역공동체 회사

5 DDA/FTA 대응

가 DDA 협상 대응

◇ 농어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

* WTO 회원국들은 2010년 DDA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(DDA 협상 현황 점검을 위해 1/4분기 중 소규모 각료회의 개최 예정)

- 세부원칙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사항 중심으로 실익을 확보하도록 노력
 - 관세상한·특별품목·민감품목 등 핵심사항에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
 - 주요 쟁점별로 G-10(수입국그룹) 및 G-33(개도국그룹)과 협력 강화
 - 수산보조금협상에서는 금지보조금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금지에 따른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
- 세부원칙 협상과 병행추진이 예상되는 양자협상에 대비, 주요국에 대한 양자협상 전략 수립
 - 주요국의 관심사항 파악 및 품목별 협상대책 마련
- 세부원칙 타결에 따른 영향분석 및 이행계획서 작성·검증 등 세부원칙 타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
 - 농어업인단체·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, 농산물 특별·민감품목 선정, 수산물 관세감축계획 등 이행계획서 작성준비
 - * 이행계획서 작성(연내 타결시): 초안(9~12월)→ 의견수렴·보완('11.1~2)→ 최종안('11.3)
 - 이행계획서 검증 및 양자협상 대응계획 마련

나 FTA 협상 대응

◇ 농수산물분야 민감성을 적극 반영하면서 동시에 농어업협력 등 상호 관심사항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

* 호주, 뉴질랜드, 페루, GCC(6개국) 등과 FTA 협상이 본격 진행 중이고 콜롬비아 등 주요 국가와 계속 FTA 확대 예상

□ 호주,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에 농수산물 민감성 반영 노력

- 특히 쇠고기, 낙농품 등 민감분야에 대하여 장기간 이행기간 확보 등 농수산물 보호 방안 마련에 협상력을 집중
- 동시에 농수산물 관련 연구·기술·인적 교류 등 협력 확대에도 적극 노력

□ 콜롬비아 등 새로운 상대국별 FTA 대응 전략 마련

- 상대국 교역 관심품목에 대한 보호방안 및 대응논리 마련
- 현지 시장조사 등을 통한 수출 확대 방안 동시에 적극 모색
 - * 콜롬비아 주요 수출품 : 커피, 과실류, 우황 등('08: 4천7백만불)
 - * 한·중·일 등 새로운 FTA 논의 동향에도 대비

□ FTA 영향분석 및 대 국민 공감대 확산 노력도 병행

- 농수산물단체, 업계, 학계 등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적극 추진
- FTA 이행시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종합 분석 추진
- 농수산물 유관기관 해외지사 등 정보수집·분석 네트워크 구축
 - 협상 상대국별 교역통계, 관세 및 유통정보 D/B화

다 한·EU FTA 대책

◇ EU 등과의 FTA에 대비, 품목별 경쟁력제고방안 수립·추진

○ 현장성·시의성 제고를 위해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대책 마련

□ 생산자단체·전문가 등과 함께 한·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방안 마련, 농가의 불안감 해소

※ (영향분석) 국내 농수산물 생산감소액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15년차에 2,481(한·미 FTA이행 전제)/3,172억원(비전제) 수준이며, 90%이상이 축산분야

○ (양돈) 질병근절 등을 통한 저지방부위 수출확대, 우수 새끼돼지 공급체계 구축, 품질향상을 위한 돼지고기 등급제 개선 등

○ (낙농) 전국 쿼터제 도입, 유가공산업 활성화, 학교우유급식 대상 확대 등 근본적인 수급안정 대책 마련

○ (양계) 난계대 전염병·뉴캐슬병 근절 및 대형닭(2.5kg 이상) 생산 확대로 생산성 향상, 수출확대를 위한 도계시설 개선 등

○ (한·육우) 농가조직화를 위한 기초·광역 한우사업단 육성, 육우고기 수요창출을 위한 전문판매장 설치 및 홍보강화

○ 품목별 경쟁력제고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 지원

□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완대책을 확정하고, 정식 서명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

○ 발표전까지 생산자단체·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·EU FTA 대책 T/F 논의 및 농어민단체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

3. 안전식품 · 안정공급

1 친환경 안전 농식품 공급

가 친환경 농어업 기반 확충

(1) 친환경 농업

◇ 지속가능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로 저탄소 안전농산물 생산
- 농약 및 화학비료등 고에너지 투입재 감축 등

-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확대 및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
 - 시군단위의 친환경광역단지(1,000ha이상) 및 마을단위의 친환경 농업지구(10ha) 지정 확대('09: 1,011 개소 → '10: 1,069 → '13: 1,350)
 - 유통비용 절감, 소비자 신뢰를 위한 종합유통센터 건립추진
*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('09~12) : 경기 광주, 총사업비 480억원
- 토양·수질 향상을 위한 '흙 살리기 사업과 맞춤형 비료지원 추진(연중)
 - 가축분뇨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, 천적·미생물 지원 등
 -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비료 지원으로 화학비료 사용 감축
* 화학비료 감축계획 : ('09.P) 295kg/ha → (10) 275 → (12) 218
-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연구활동 및 소비촉진 홍보강화(연중)
 - 친환경농업연구센터 2개소(전남대, 강원대)를 설치하여 농법, 농자재,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및 농업교육 기반 마련(12월)
 - 소비지 판매장 지원, 사이버 친환경농산물거래소 활성화, TV·라디오 홍보, 학교·공공기관 급식 등 대량수요처 지속 발굴 등
*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: ('09) 8,400개소 → ('10) 9,200

(2) 친환경 어업

◇ 친환경 어업기반을 확충,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어업으로의 전환 촉진

- 자원이용형 어업에서 자원관리형 어업으로의 전환 촉진
 - 연안에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(250ha, 150억원), 생태계 회복을 도모하고 CO₂ 흡수원·바이오매스로 활용
 - 바다목장 조성사업(여수 등 5개소 완공) 및 총허용어획량(TAC) 모니터링 확대(읍서버 43→70명)
 - 중앙정부 중심의 어업관리에서 지자체 맞춤형 어업관리로 전환
 - 지자체 어업관리 권한 이양을 위한 수산관계법령 개정안 마련(12월)
- 해역별로 어장관리해역(zone)을 설정, 퇴적물 수거 등 어장 정화
 - 어장환경실태 조사(남해안 '08~'11)를 거쳐 해역별 'ZONE' 지정
 - 남해안의 만(灣)을 중심으로 시범 어장관리해역 지정(6월, 2~3개소)
 - 오염도가 높은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·감독 강화
 - 가두리 어장환경평가제도 도입 검토(9월)
- 양적 성장 위주의 양식어업을 친환경·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
 - 친환경배합사료 보급(165억원)으로 어장환경 오염 및 수산자원 남획방지
 - 안전한 수산물 생산·공급을 위한 수산물이력제 확대
 - * ('09) 550개소/12품목 → ('10) 600/13 → ('15) 850/15
 - 생산해역 위생관리를 위한 생산해역위생관리기준 고시 제정(12월)
 - 해역등급 설정(60개) : 청정해역, 준청정해역, 관리해역, 금지해역

나 | 농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

◇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과 소비자 소통강화로 안전·안심정책 구현

□ 위해요소 사전예방 시스템을 확충하고, 철저한 안전성 검사

- 농산물우수관리(GAP) 대상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(기존 105개)
- 축산·수산위해요소중점관리(HACCP)를 각각 생산비중 70% (현행 60%), 192개 양식장(현행 152개소)으로 확대 운영
- 축산 항생제의 사료첨가 중지('11년, 하반기)를 위하여 법령개정 및 제도정비
 - 사료첨가 항생제 수: ('07) 16종 → ('09) 9 → ('11,하반기) 0
- 농식품 안전성 검사를 확대('09 : 75천건→ '10 : 80)하여 위해 발생 사전예방 기능 강화
 - 농산물 57천건→60, 축산물 10천건→12, 수산물 7천건→8
- 농식품안전지표를 마련(7월), 우리의 식품안전시스템을 진단하고 선진국과의 비교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 도출
 - * 선진식품안전 프로그램 도입여부, 유해물질관리대상 범위, 이행수준 등
-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을 실시(연중, 35만명)하여 농약·비료 오남용 및 중금속 검출 문제 등 사전 방지

□ 2011년부터 일반 농가에서 사용하는 고독성 농약 12종 사용 중지

- 고독성 농약 3종 사용중지('10년), 11년까지 전면 사용중지
 - 고독성 농약수(농가용) : ('09) 12 → ('09) 9 → ('11. 하반기) 0
- * 고독성 농약 15종중 산림·검역용 3종 제외

- 축산물 위해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 및 감시 체계 재정립
 -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사전 예방체계 확립(연중)
 - 내장·뼈 등 부산물의 위생관리, 성수기·하절기 등 시기별 취약 분야 선제적 기획 감시 추진

- 소비자 이해와 신뢰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·홍보 추진
 - 주부와 학생대상 알기쉬운 식품안전 교육자료 발간 (9월, 학교교재로 이용되는 인정도서 추진) 및 체험·학습 프로그램 실시(100회)
 - 농식품안전상담센터(1577-1203),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(foodsafety.go.kr)를 지속 운영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호하고 쌍방향 소통 강화
 - 유사한 인증제 통합을 추진하여 소비자 인식도를 제고
 - *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인증 통합 등 추진

- 축산물, 수산물 등 품목별로 분리된 농식품부 산하 검역·검사 관련 3개기관 통합 추진
 - 공통인력·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
 - 통합기관내 검사검역기능과 분리된 독립적 위험평가기관을 설치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 위험평가 기반 마련
 - 대상 : 국립수의과학검역원, 국립수산물검사원, 국립식물검역원
 - * 위험평가: 식품의 위해 가능성과 심각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과학적인 절차

다 수입농수산물 관리 강화

- 쇠고기 수입에서 판매까지의 거래내역을 전산관리하기 위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도입(12월)
 - 거래단계별 유통정보 실시간 관리로 사고 발생시 긴급회수
 - * 이력관리시스템 개발('09.12), 시범운영·홍보('10.1~11), 본격 시행('10.12)
 -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(12월)
 - * 수입쇠고기 유통식별번호 부착 및 유통단계별 거래내역 전산등록 의무화 등
- 쌀·김치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
 - * 현행 100㎡ 이상 음식점에서 표시
-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위생 관리 강화
 - 안전성 부적합 빈발 품목을(8개국 19개 품목)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(연중)
 - 부적합 빈발 품목 : 가리비, 농어, 떡장어, 다슬기 등
 - 수산물 위생약정체결 확대 및 등록공장 현지 위생점검 강화(연중)
 - 중국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태국 → 러시아, 대만 등으로 확대
 - * 등록공장 : 2,925개소(중국 1,858, 베트남 442, 인니 387, 태국 238)
- 검역관 교육, 검역기술개발 등 수입위험평가 역량 강화
 - 축·수산물 검역 전문성 보강을 위한 검역관 교육 실시 및 위험평가 국제전문가 초청세미나 실시 등(연중)
 - 식물검역기술개발 5개년('10~'15) 계획 수립 및 추진(1월)
 - * 외래병해충 조기에찰을 위한 기술·장비개발 등 20개 세부과제

라 가축·수산 질병 최소화

◇ 가축·수산 질병 국내유입 방지 및 사전 방역관리체계 구축

- 능동적 사전예찰 중심의 AI 및 신종인플루엔자 방역체계 운영
 - AI 재발 위험이 높은 22개 시·군에 대한 임상예찰(매주) 및 유입가능 경로별(철새, 오리, 닭 등) AI 예찰검사 지속 추진
 -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국산 돼지(고기), 가금(육) 검역 및 국내 양돈·가금류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지속 실시
 - * 전문 검사시설 6개소 설치(6월), 진단키트(7월) 및 예방백신(12월) 개발
-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맞춤형 방역 추진
 - 구제역은 국내 유입 가능성 높은 3~5월에 집중 방역·검역
 - * 수입건초 소독 및 정밀검사, 농장·종돈장·도축장 일제소독(매주) 및 혈청검사 등
 - '14년까지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질병검사 확대(2회 → 3회/년)
 - 결핵병 모니터링검사 확대 및 사슴 살처분보상금 조정(100 → 60%)
 - * 한육우 : ('09) 300천두 → ('10) 600, 사슴 : ('09) 경기도/2천두 → ('10) 전국/5
 - BSE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을 위한 평가보고서 제출·대응(1월~)
 - * '09.12월 현재 BSE 예찰 기준(300천점) 초과, 동물성단백질 사료금지조치 완료
- 수산동물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
 - 수산동물질병 종합관리대책('10~'14년) 수립·시행(10월~)
 - 신고체계 구축, 정보수집 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등
 - 넙치 등 방류 수산동물 질병 검사어종 확대(44종 → 55종)
 - 넙치용 질병예방백신(비브리오패균, 노다바이러스) 특허출원(12월)

2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

가 중장기 쌀 수급안정방안 마련

◇ 구조적 잉여 물량 해소를 통한 수급안정 및 유통선진화 추진

- * 쌀 생산 여건 고려시 평년작의 경우에도 매년 평균 20만톤, 09년산(대풍작)의 경우 40만톤 잉여물량 발생
- * 관세화 유예('14년)로 의무수입 증가('09. 31만톤 → '14. 41), 재고부담 가중

□ 논에 콩, 조사료 등 다양한 작물의 재배 확대

- 밭벼 재배지, 중산간지 등 쌀 생산성이 낮은 지역 중심으로 쌀 이외 작물(콩 등)재배를 위한 **논농업 다양화 방안 마련(6월)**
 -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다양화 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구축
 - 농가의 참여 유도, 수요 확대를 위해 **수매제도 개선 및 수입량 조정 등 검토**
- **간척지를 활용한 조사료 작물 재배 확대 추진**

□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

- 농민단체 주관 토론회 등으로 농업계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 조성
 - * '11년 관세화시 '15년 관세화 대비 수입물량 8만톤 감축(41만톤 → 33만톤)

□ 아침밥 먹기 등 쌀 소비촉진 및 쌀가공식품 활성화 추진

- 아침밥 먹기 운동(초등학교 아침 간편식 공급, 주부 대상 아침밥 먹기 강좌 등) 전개 및 쌀의 우수성 홍보(국제 세미나 개최)
- 「쌀가루 10% 프로젝트」 추진으로 밀가루 사용량의 10%(20만톤)를 쌀로 대체('08 : 가공용 소비 27만톤 → '12 : 47)
 - 공공부문(군대, 학교 등)부터 지속적인 쌀 가공식품 수요 창출
 - * 건빵(군 급식용) : ('09) 쌀 13% 함유 → ('10) 쌀 30% → ('11) 쌀 100%
 - 가공용 정부쌀 할인 공급 등 안정적 원료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가공 업체에 대한 시설자금('09, 100억원→ '10, 400) 및 R&D 등 지원확대

□ 가격 형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이버 거래 및 선물거래 도입

- 지역농협과 RPC(미곡종합처리장) 등 도정업체간 벼 사이버거래 시스템 구축(4월), 선물거래 도입 기반을 마련
- 범부처 상품거래소 설립과 연계한 쌀 선물거래 도입 준비
 - 상장품목, 거래 조건 결정 등 연구용역(3~12월) 및 의견 수렴 등

□ 소비자유통업체에 대한 대응력 확보, 물류 규모화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대형 쌀 유통회사의 설립 추진

- 설립 준비단을 구성(3월)하여 사업 방향, 재원 확보 방안 등 검토
- 농업인, 지역농협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설립 본격화(하반기)
- 미곡종합처리장(RPC) 신규진입·퇴출 제도화, 광역(2개 시군이상) 단위 통합 등 경쟁력 강화 병행

나 밀/밀가루 공급·유통 개선

◇ 밀/밀가루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산 밀 재배 확대, 해외 밀 공급망 확보를 추진하고, 제분업계 경쟁력 강화 유도

□ 국산 밀 생산 확대를 통해 밀 자급률 향상 추진

○ 최근 국산 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재배 면적 증가 추세

* ('08) 2.5천ha(자급률0.4%) → ('09) 5.1(0.9%) → ('10P) 8.6(1.5%)

○ 수요에 기반한 안정적 생산 확대 유도('17년 자급률 10% 목표)

- 자율적 수급 조절을 담당할 국산 밀 대표조직 육성(9월)

- 제분업체·식품업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등 국산 밀 수요 확대

□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의 안정적 해외 조달 방안 마련 검토

○ 곡물 메이저를 통한 수입 위주에서 자체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추진하고 수입선 다변화 모색

* 현지상황, 국내 도입시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진출 국가 검토

□ 제분업체의 쌀 가공산업 참여 확대 및 밀가루 가격 합리화 노력 유도

○ 가공용 정부쌀 공급체계 개편(정부 “쌀” → 제분업체 “쌀가루” → 식품업체) 방안 마련

* (쌀+밀)가루 유통을 통한 쌀국수(설렁탕 사리, 자장면 등) 시장확대 도모

○ 국내 밀가루 가격과 국제 밀 가격의 연계성 강화

* 연동되지 않는 경우 밀가루 직수입, 제분업계 신규 진입 등 다양한 방안 검토

다 식량자급률 제고

◇ 중장기 농정지표로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목표치와 연계한 자급률 향상대책 마련 추진

□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'07년에 설정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

○ 자급률이 낮은 품목의 목표치 상향, 수산물 자급률 목표치 설정

* '15년 식량자급률(주식용) 목표치는 54%로 현재 수준(67.4% : '09 추정치)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된 상황

- 사료용은 사료용 곡물과 조사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설정

○ 국내·외의 안정적 식량 확보 가능성, 국민의 식품접근성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보완 지표 개발('11년) 추진

-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(3월~), 토론회 등 의견수렴(~12월)

□ 자급률이 낮은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및 국산에 대한 수요 확대 등 자급률 제고방안 마련(6월)

○ 농농업 다양화, 겨울철 재배를 포함한 2모작 생산체계 구축

- 밀 조숙품종 개발 * 숙기:(현재) 6월 상순 →('12) 5월 하순

- 논콩, 조사료 등 벼 대체작물 재배기술 및 작부체계 설정

○ 식품·외식업체와의 계약재배 등 국산 농수산물 수요 확대

3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

가 식품산업 진흥기반 확충과 전략품목 육성

- ◇ 식품산업을 고부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,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
- 기능성·발효식품 육성, 원산지·품질관리 강화 등 소비자 니즈 충족

□ 세계 식품시장은 약 4조 달러 규모로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증가

*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'20년 전체 식품시장의 40%차지 전망(International Data Group)

○ 주요국은 식품의 가치를 활용, 부(富)와 고용 창출

* 네덜란드 푸드밸리(470억 유로 매출, 60만명 고용), 미국 나파밸리(425억불, 23만명) 등

* 스위스는 국내생산이 없이도 커피(9.3억불), 코코아(9.1) 수출

□ 국가식품클러스터(익산)를 R&D 중심의 수출지향형 국가산업 단지로 조성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

○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'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'을 설립 (6월)하고, 클러스터지원센터·기업지원시설 등의 운영방안 마련

* 전북지역 이전 예정인 농진청·한식연 등과 연구협력체계를 구축

○ 조성 예정지(익산)를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('11년)하고, 국내외 식품기업·연구소 등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강화

* '11년 착공을 목표로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(11월)

* 식품기업(145개), 식품연구소(10) 등을 유치, 연 4조원 매출, 22천명 고용 목표('15)

□ 전통식품의 산업화 및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

○ 발효기술 연구 강화 등을 통해 전통·발효식품의 산업화 촉진

- 세계김치연구소를 발효기술 연구 중심지로 육성(연내 착공, '11년 완공)

* 한식연 부설기관으로 출범(1월), 발효기술 개발전략 수립(12월)

- 고추장·된장 CODEX 채택('09.7)을 계기로 장류식품의 산업화·세계화 추진

○ 술 원산지 표시제 도입(12월) 및 품질인증제 실시('10년 : 탁주, 청주)

* '우리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('09.8)' 후속조치로 추진

○ 천일염 위생수준 향상 및 이력추적제 도입(7월 이후 시범사업)

* 소금산업 중장기 발전 종합 로드맵 마련(6월)

○ 국내산 농수산물용 소재로 한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

- 기능성 소재 발굴·평가, 인체적용시험 연구지원 및 DB 구축(14억원)

□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강화 지원

○ 식품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대학·식품 기업간 공동 실습프로그램 운영(8개소)

○ 국내외 식품 생산·유통·소비, 산업전망 등 관련정보를 DB화하여 제공

* 식품·외식·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식재료 구매실태와 의향 등 조사

○ 수입의존도가 높은 식품 소재·기자재 국산화율 제고 방안 마련(9월)

* 식자재 박람회 등을 통해 국내산 소재·기자재 전시 및 소비촉진 유도

□ 농어업과 가공·외식서비스 산업간 연계 강화

○ 농어가의 소규모 식품가공 활성화를 위해 농어가 실정에 맞도록 시설기준을 완화(관계부처 협의)

* 창업 가이드, 경영컨설팅, 위탁가공·판매 및 소규모 시설기준 가이드라인 등 제공

○ 생산자 참여형 농식품기업 육성(60억원) 및 '11년 광역클러스터 사업단 조기선정(10개)을 통해 지역 농수산물 활용 촉진

* 클러스터 사업 내실화를 위해 클러스터사업단간 자율협력 체계 구축

○ 식재료 구매·유통실태 조사, 가공시설 확충, 규격 표준화 등 식재료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(12월)

나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는 한식

- G-20, 한국방문의 해를 한식이 세계로 뻗어가는 기회로 활용
 - G-20 T/F를 구성(1월중), 간소하고 품격있는 한식메뉴 등 준비
 - * G-20 행사 등 유형별 메뉴 및 G-20 추천메뉴 20선 개발, 한식당 ‘맛지도’ 제작·배포, 서비스 교육 등 실시
 - * 회의기간중 해외언론인 대상 한식체험 등 한식문화행사 추진
 - G-20 회의에 이어 ‘Korea Food Expo 2010’을 개최(11월, 코엑스), 한식 해외홍보의 장으로 활용
- 간소하고 품격있는 식단 개발로 한식을 ‘세계적인 웰빙음식’으로 정착
 - 반찬수를 유형별로 간소화 한 건강·간소·고품격 메뉴 개발(6월)
 - * 고급 식기, 메뉴판 등 한식당의 고급화 디자인 개발·보급(10월)
 - 대표 한식당부터 우선 활용을 유도하고, 해외 및 일반 한식당으로 확산
 - * 우수 한식당을 선정, 컨설팅 자금 등 지원(5억원)
- 한식 조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한식 전문인력 양성
 - 한식전문 조리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식조리 특성화 학교(대학·고교) 지정(3개소)
 - CIA, 르꼬르동블루 등 해외 유명 요리학교에 한식강좌 개설
 - 재외공관 조리사 지원 및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 확대(600→1,000명)
 - * 재외공관에 한식조리 전문가 활용 시범사업 추진
 - 경쟁력 있는 조리사 양성을 위해 차별화된 교육으로 스태프 육성
 - * 미학·역사·사회학 등 전문교육 병행실시 : ('09) 50 → ('10) 100명

□ 국내 한식업체의 해외진출 본격화에 대비한 지원 강화

○ 해외진출에 필요한 법령·제도·시장여건 및 진출전략 정보제공 강화

- 한식세계화 정책, 현지여건 등의 정보를 종합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

* 현지조사 확대 : ('09년까지) 미국·일본·중국·베트남 → ('10) 호주·유럽

○ 해외진출 외식업체 및 현지 한식당에 창업·경영컨설팅 및 시설
자금을 지원, 성공적 정착 유도

□ 일식·중식 등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 지원

○ 해외 한식당 협의체를 구축, 식재료 공동구매·마케팅 등 구심체로 활용

* '10년은 일본(2), 중국(2), 미국(2)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전개

○ 인테리어 모델 보급, 경영·서비스 교육 등으로 한식당 이미지 개선

○ 우수 한식당 인증제 실시(6월)로 해외 한식당 신뢰 제고

○ 외국인이 한식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물 등 제작·보급

* 한식의 메뉴·유래 등 홍보자료를 만화·소책자 등으로 제작·보급

□ '한식재단'을 출범(2월), 민간의 전문성을 살려 추진동력 강화

○ 재단은 한식 홍보, 해외 한식당 인증, 한식당 경영지원 등 추진

○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준비('09.12~'10.1), 한식세계화추진단
회의 등을 거쳐 발족

다 녹색 식생활 교육 확산

◇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유도 및 음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 확산

- 「식생활교육지원법(09.11.28시행)」을 토대로 범국민적 식생활 운동 추진

□ 저탄소형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

- 농식품부내에 민·관 공동의 '국가식생활위원회'를 설치(1월)하고, 향후 5년간의 '식생활 교육 기본계획'을 수립
- 식생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'녹색식생활지침' 개발·보급(3월)
 - *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방안 등과 연계, 교육교재로 활용
- 가공식품 푸드마일리지 정보 제공(포털사이트 등) 및 민간 자율표시 유도
 - * 식품관련 단체,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푸드마일리지 알기 캠페인 전개(6월~)

□ 민간주도의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

- 가정·학교·지역사회 등 대상별로 맞춤형 식생활 교육 전개
 - (가정) 아침밥 먹기,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건전한 식생활 유도
 - (학교) 영양·실과교사들을 통한 교육 강화(교과부 협조)
 - (지역사회) 지역별로 식생활계획, 식생활교육조례 등 제정·활용
- 지자체·교육기관 등을 통해 권역별·대상별 식생활 교육 전개(20회)

□ 전통문화·농어촌 체험 등과 연계, 지역 농식품 소비 촉진

- 농촌체험마을, 농가맛집 등을 식생활 체험공간으로 활용
 - * 1,300여 체험마을 등 대상 식생활 체험공간 지정 및 향토음식 자원화·체험장 육성(15개소)
- 텃밭조성, 유기농채소 기르기 등 학교내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개발·보급(6월)
 - * 전통 식생활과 연계한 맞춤형 급식시스템(2종) 등 개발

라 농식품 수출 확대

◇ 농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해외 수요 창출로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 추진

* 수출목표 : ('09p) 48 → ('10p) 64 → ('12p) 100

□ 농식품 수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품목개발 및 시장 다변화 추진

○ 유망품목 수출시장을 다변화를 위한 검역협상 적극 추진

- 파프리카(중국), 삼계탕(미국), 감귤(필리핀), 채소종자(브라질) 등

* 중국의 파프리카 시장 규모 : 약 200만톤(피망포함) / '09 국내 생산량 : 약 3만톤

○ 한식 세계화 등과 연계하여 국산 식재료 수출 확대

- 해외진출 국내기업·한식당·학교 등을 대상으로 식재료 박람회 개최, 식재료 목록 보급, 바이어 상담회 등 개최

* 9,600여 국내 기업이 세계에 진출, 현지 종사자 165만명 고용(kotra)

○ 일·중·러 등 주요 수출국에 해외 물류센터 신규 운영 및 kotra 공동물류센터(20개소) 활용

□ 규모화된 경영으로 수출경쟁력을 갖추도록 수출전문단지 육성

○ 원예전문생산단지(168개)의 시설현대화 및 수출활성화 지원

- 시설개선자금 융자(782억원) 및 우수단지 물류비 인센티브(10~15% 추가) 지원

○ 간척지 등을 활용, 생산·유통시설 등이 결집된 첨단 유리온실단지를 조성하여 수출전진기지화

- 정부는 기반 조성에 투자하고, 시설 등은 민간 자본 유치

* '10년 유리온실 시범조성(10ha) : 사업자 선정(3월), 착공(9월), 준공('11.10월)

□ 가공식품 수출확대를 통해 농식품 수출의 고도화 추진

○ 가공밥·주류·장류·과자류 등 고부가 상품 수출 지원 확대

- 해외 시장조사 및 마케팅, 수출상품 연구개발 투자 등 지원

* (예)매직로즈(온도에 따라 색 변화)는 일반 장미보다 4배 고가로 일본 수출('09 :100만불)

- 돼지고기 및 열처리 가공제품 신규수출이 가능해진 일본·홍콩 시장 조기진출 지원(시설개선, 마케팅, 바이어초청 등)

○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공단지(부산 감천항 일원) 조성('09~'12, 1,372억원)

□ 물류비 지원제도 개선 등 수출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

○ 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물류비 총액한도제* 등 추진(1월)

*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물류비를 통합하여 표준물류비의 45%(안) 한도 설정

○ 생산농가-수출업체를 계열화한 수출선도조직(20개소) 활성화

- 품질고급화 및 해외마케팅(박람회·관측전 참가) 등 지원

□ 해외 소비자·바이어를 대상으로 공세적 마케팅 추진

○ Korea Food Expo 2010(11월)를 국제행사로 확대, 해외 식품기업·바이어 유치

○ 해외 유통·외식업체와 업무약정을 체결, 수출업체 상설 입점 추진

* 업무약정 체결: ('09) 일본 코포삿보로, 중국 RT 등 → ('10) 일본 유니·이즈미, 싱가포르 NTUC 등

○ 수출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거양

- 40여 재외공관과 연계한 한식 홍보행사, 해외 유명 박람회에 kotra와 연계 참여

- 중소기업청과 협력, Gobiz Korea 사이트에 'Korea Green Products'관 신규 개설

4 해외 농림어업 협력 강화

가 협력을 통한 상생적 자원 개발

- 곡물자원 : 장기적 공급불안에 대비, 진출국가 확대 및 개발방식의 다양화
 - 농장개발과 함께 유통거점 확보(저장·가공·물류시설), 현지기업 지분 참여 등 선진방식 적극 추진
 - * ('09) 5개국 11개 기업 → ('10) 6개국 16개 기업 (20만톤 생산 및 유통)
 - *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개정하여 유통공사의 해외곡물자원 확보 기능 강화
 - 민관합동의 국가별 맞춤형 지원팀을 구성, 현지진출기업의 현장애로 해소
 - 투자·유치국이 win-win할 수 있도록 국제동향과 조화된 국내 규범 마련 및 진출국가와의 협력 강화
 - * 투자의 투명성, 식량안보 확보, 관련 법과 제도 준수 등
- 수산자원 : 해외 수산자원 확보 기반 구축
 - 참치자원 보유국(태평양 도서 8개국)과 협의체(KOPNA) 구성
 - 제1차 수산 고위급회의 → 공동협력과제(선원학교, 가공공장 등) 개발
 - 연해주 어선 조선소, 수산물 유통시설 참여 등 한·러간 교류 확대
 - 해조류 펄프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우뭇가사리 시범양식(130ha) 실시 및 CDM(청정개발체제) 등록 신청
- 산림자원 : 해외조림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 조기 확보
 - '09년 정상외교로 확보한 인니, 캄보디아에 40만ha 조림사업 추진
 - 한·인니 산림협력센터 설립으로 기업지원체제 구축
 - 중남미, 아프리카 등 해외조림 지역 다변화 및 협력 강화

나 해외 농림수산업협력 시스템 개편

- 종합적·체계적 해외농림수산업협력 추진을 위한 총괄 시스템 구축
 - 분산 추진 중인 협력사업을 통합·조정하고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민관협의체인 '글로벌농림수산업협력추진협의회'를 구성
 - 농식품부, 농진청, 산림청, 농어촌공사, 농경연, 민간으로 구성
 - 해외농림수산업협력사업 추진 담당기구 설립, 효율적 사업관리
 - (1단계) 농촌경제연구원(아시아농업연구센터) 활용('10년)
 - (2단계) 독립된 "글로벌농림수산업협력센터"로 확대('12년)
 - 인력·기술, 인프라 등 패키지 방식으로 개도국 지원
 - 교육훈련 위주에서 인력, 기술, 시설, 인프라 지원 등 패키지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원규모도 확대('09: 28억원 → '10: 42)
 - '10년중 시범사업추진 성과를 평가·보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
- < DR콩고 지원 시범사업 >

 - 일정 : 사전조사('09.11~12) → 계획수립 및 MOU('10.5) → 사업추진('10.6~)
 - 추진단 구성 : 개발계획수립(농경연), 기술훈련·전문가 파견(농진청), 농업인프라(농어촌공사), 산림투자 환경조사(산림청)

◆ 농어업 기술·식량자급 기반 지원 ⇒ 자원개발 및 타 분야 진출 지원
- 수원국·해외진출 기업의 수요를 고려,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 확대
 - * 기술·교육훈련 등 농촌개발경험 전수, 해외농업정보 분석, 진출 기업 기술지원
 - *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설치 : ('09) 6개국 → ('10) 10
 - 아시아 지역의 기술협력추진을 위한 '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이니셔티브(AFACI)' 사업 본격 추진('09.11월 출범, 12개국)
 - 초청훈련, 워크숍, 생산성 제고 시범사업, 권역별 이슈 공동연구 등
- 농업기술·교육지원 등 농업협력을 해외농업개발사업 등 자원개발과 연계하여 해외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

4. 지역경제 활성화

1 농어촌 산업 육성

◇ 지역 핵심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촉진 및 농어촌 특성에 맞는 소규모 창업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소득 확충

가 향토지역 산업화 및 도농교류

□ 지역 핵심자원 산업화를 위한 전략적·체계적 투자 유도

*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(포괄보조) : 2,356억원, 163개 시·군

○ 산업화를 위한 지역단위 R&D 투자 활성화

- 중앙-시·도-시·군이 역할 분담하는 종합적·다층적 지원체계 구축

○ 지역간 연계·협력 프로그램 지원

- 동일 테마(품목)에 대한 시·군간 공동마케팅, 지자체간 연계·협력 등

○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전략적 수요처 발굴 지원

- 제2회 농어촌산업박람회 개최(6월)로 지자체 공동 홍보·판매 지원

- 지역 생산품의 시장성 등 정보분석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

□ 소규모 창업 및 여성농업인 경제활동 지원

○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5개년 종합계획수립(10월)

* 「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하위법령 제정(5월)

○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 및 경영 지원

- 도-농 여성기업인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확대('09 : 31쌍 → '10 : 60)

* 창업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경영기법전수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

- 생산·가공 시설, 포장개발, 유통개선 등을 위한 지원 확대

* 지원계획 : ('09) 17개소, 17억원 → ('10) 18, 18

□ 농어촌형 제조업 경영환경 개선 지원

- 농어촌 기업 애로 및 규제사항 등 상시 발굴체계 구축, 가공·마케팅·기술개발지원 등 지원방안 마련(10월)
- 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리모델링 등 인프라 보강(52개소)
 - * 지역 식품산업, 지역핵심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단지화 유도

□ 농어촌 체험·휴양 시설 확충 및 품질 향상

- 체험마을, 테마공원 등 농어촌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
 - * 체험마을 77개소, 테마공원 14개소 등 신규 조성
- 체험마을 시설 및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품질 향상 유도(12월)

□ 도농교류 생활화를 위한 도시형 도농교류 저변 확대

- 시민텃밭, 옥상정원 등 생활 속 도시농업모델을 발굴하고, 도농교류 안테나 숍 운영계획 수립(10월)
- 도시 초·중학생의 농어촌 체험 및 교육 활성화
 - 도시학생이 한학기 이상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지역 학교를 다니는 '농어촌 유학' 활성화를 위한 시범 사업 추진(2개소)
 - 체험마을-학교간 결연을 맺고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'팜스쿨(farm school)' 시범 운영
- 도농교류를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
 - 체험지도사, 마을해설가 등의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

나 농산어촌 체험관광 글로벌화

□ 전통·경관 및 관광자원 등이 풍부한 농산어촌 20곳(Rural-20) 선정

- 농어촌체험마을 10곳, 한국적 경관과 멋을 보유한 마을 10곳

* 지방 개최 예정인 G-20 정상회의 부대행사(장관급 회의, Fourm 등) 개최지 고려

□ 지역특유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

- 이야기 발굴, 관광자원(향토음식, 축제 등)을 연계한 **여행코스 개발**

- 주변 자연휴양림, 숲길 등과 연계하여 복합적인 체험 기회 제공

- 주요 지역(2개소)은 문화부와 협력 추진

- 농산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문화 콘텐츠화, 공공시설의 문화 공간화, 지역특산품의 문화상품화 등

□ 국내외 관심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

- 외국인을 대상으로 '**Rural-20 체험단**' 운영

- G-20 회원국 대사관, 인터넷(웰촌 포탈),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(7월)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여 외국인 체험단 모집

- G-20 대표단, 취재단 등의 **농산어촌 투어 이벤트** 개최

- G-20 회의 참석자가 회의 이후 Rural-20 마을 중 1~2개소를 투어하면서 우리 농산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 기획

-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(7월), 여행사·대중매체·인터넷 활용 홍보

2 지역 공동 경영체 활성화

가 지역 공동 경영체 육성

(1) 마을단위 농업법인 설립·운영

◇ 농업비중이 높은 마을단위로 공동 영농·판매 등을 수행하는 지역농업법인을 구성하고, 지역경제의 구심체로 육성

* 법인 설립수 : ('10) 30개 → ('12) 100

□ 마을 거주자, 지역농협, 지역 농업법인, 외부법인 등의 출자로 마을단위 농업법인* 구성(우리나라 자연마을은 43천개 추정)

* 마을의 결속력, 재산상태 등을 감안해 향후 비영리사단, 조합 등도 감안

○ 발전전략 마련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운영협의회 한시 운영

□ 사업 형태는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화하고, 관련 정책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해 주업농과 같은 개념으로 육성

○ 형태(예시) : 농기계 공유 등 비용절감형 영농, 고령농 영농 수탁, 대규모농지 공동경작, 직불금·교부금 공동활용 등

○ 지원(예시) : 교육·컨설팅 지원(마을발전계획, 記帳 등), 공익형 직불제 우대, 시설공동이용사업·지역개발사업 우선 지원 등

□ 각 도별 3~5개 마을 추천,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사·선정



(2) 자율관리어업 확산 및 내실화

◇ 어업인·어촌공동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을 수산정책의 기본이념으로 확산

□ 자율관리어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내실화

- 참여 공동체 확대('10: 840개소 → '12: 1,200, 전 어촌계의 60%)로 어촌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중심세력으로 육성
 - 공동체 가입 초기 조업손실 보전 및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육성사업비 지원 확대('10: 237억원 → '12: 1,000)
 - 지역별 워크숍(5회), 수산사무소 순회교육 및 해외연수(3회) 등을 통해 지도자 리더십 및 회원 의식개혁 교육 강화
 - 우수공동체 견학을 통해 자원관리 정보교류 및 성공사례 전수
 - 가공·유통·관광 등과 연계, 우수공동체는 '마을어업회사'로 육성('12년까지 50개)
 - 성장기반이 마련된 공동체는 지원에서 졸업시켜 자립 유도
 - 지역별 특성을 고려, 시범 성공모델을 선정하고, 민간컨설턴트 제공 및 별도 지원 등을 통해 집중 육성
- * 전남 무안 “탄도만 낙지공동체” : 4개면 13개 어촌계가 결성하여 낙지자원관리, 불법어업 감시, 어장청소 등 자율관리로 소득 3.3배 증가('03 : 23백만원 → '08 : 76)

□ 자율관리방식을 수산정책 전반에 적용

- 총허용어획량(TAC) 제도는 대상 어종을 확대하고('10: 11개 어종 → '15: 15개) 자율관리를 바탕으로 어황 여건에 탄력 대응
- 어업자·어업자단체간 협약에 의한 자원관리 도입(4월 법 시행)

(3) 농어촌 공동체 회사 육성

◇ 주민이 주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「농어촌 공동체회사」 육성으로 농어촌 활력 제고

□ 농어촌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회사 모델 발굴('10.6)

○ 연구용역 결과('09.12)를 토대로 농어업형, 도농교류형, 서비스 제공형 등 농어촌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 개발

□ 모델 유형별 특성에 맞게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(12월)

○ 공동체회사 보육센터 설립,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등

* 「삶의 질 향상 특별법」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 마련('09.11월 국회 제출)

○ 사회공헌 희망기업, 1사 1촌, 여성농업인-기업인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컨설팅 등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병행 실시

○ '12년까지 50개소 육성 목표, '10년에 2개소 시범사업 추진

< 사 례 >

(농식품형) 전통식품 제조, 농가 레스토랑, 로컬푸드 등 농식품 가공·유통, 친환경 농자재 생산, 농작업 대행 등 농어업을 매개로 하는 사업

* 고삼농협 생명농업지원센터 : 지역 주민 34명을 고용하여 친환경 농자재 생산, 농작업 대행, 학교급식 농산물 배송 등 사업 운영(월80~150만원/1인)

(도농교류형) 체험마을, 마을단위 휴양법인, 농어촌 유학센터, 문화공방 등 농어촌 자원 발굴 및 도농교류 확대

* 양양 철딱서니학교 : 농어촌 유학사업으로 소득 증대(유학비 월 70만원, '09년 현재 23명 유학 중). [5명 일자리 창출, 월 14백만원 수입]

(서비스제공형) 돌봄 서비스, 반찬배달, 버스 운행 등 서비스 제공

* 거창 돌봄지원센터 : 방문목욕, 요양서비스 등 복지부 바우처사업을 위탁운영하면서 독거노인 등에 대한 반찬서비스 제공(32명 고용)

3 농어촌 복지·생활여건 개선

가 농어촌 삶의 질 향상정책 강화

◇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'제2차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('10~'14)'추진 및 2대 선진제도 도입

□ 범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'삶의 질 향상 5개년계획'(10~14) 추진

○ 2대 선진제도* 도입 및 7대 부문별 주요과제** 추진

* 농어촌 서비스 기준,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운용

** 보건·복지, 교육, 생활 인프라, 경제활동, 문화·여가, 환경·경관, 지역역량

□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 영위와 관련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정·운용

○ 주거, 교통, 교육, 보건의료, 응급 등 8개 분야의 ① 주민 수요가 많고, ② 측정 가능하며, ③ 정책목적으로 적합한 31개 항목 선정

- 재정여건과 시급성,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5년 동안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 설정, 매 5년마다 항목 및 목표 보완

○ 중앙정부, 지자체 등이 관련 사업 추진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

- 주기적 실태조사(항목별 1~2년 주기)로 서비스 수준 점검, 권고사항 제시

* 실태조사는 '11년부터 매년 실시하되 심층조사가 필요한 항목은 격년제로 실시

- 실태조사방법, 추진체계, 평가방안 등 세부 운영방안 마련(6월)

* '14년까지 서비스기준 달성여부 평가를 위한 사회통계기반 구축

□ 정부정책 입안단계부터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차별적인 영향 발생을 최소화하는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운용

○ 가이드라인 마련(6월), 시범적용 및 보완(12월)

나 농어촌 복지지원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강화

◇ 농어업인·농어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

□ 연금·건강보험료 지원 내실화 등 사회안전망 지속 확충

○ 농어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을 확대

* 연금보험료 최대 지원액(연간) : ('09)394천원/인 → ('10)426천원/인

○ 건강보험료는 보험료의 50%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,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추진

* 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('09.4.20)

□ 고령·영세농 등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활성화

○ 질병·사고 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(70세까지→75)

* ('09) 13천 가구 / 47억원 → ('10) 15천 가구 / 55억원

○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을 경로당, 다문화가족 등으로 확대

* 마을회관, 경로당 등에 가사도우미 지원 시범추진(1월)

○ 농어업인 질환예방 및 건강증진지원 방안 마련

- 농어업인 질환 전문센터지정 및 특수건강검진제도 도입 등

* 연구용역(3월), 지원방안 마련(10월)

○ 이민 여성농업인 대상 단계적 영농교육 확대

- (1단계) 기초 농업교육 500명, (2단계) 1:1 작목별 맞춤교육 500명

* 농어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장기 지원 : '20년까지 인력 육성 10천명

□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강화로 육아·교육 부담 경감

○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

* ('09) 가구당 농외소득 3,500만원 미만 → ('10) 3,700

○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확대

*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규모 : ('09) 475억원 → ('10) 505억원

□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고

○ 농어촌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및 복지지원을 위해 여성
농업인센터 시설 보완 지원(15개소, 10억원)

* 보육시설평가인증에 적합하도록 시설 개선

○ 여성협업농(부부농업인중 여성)에 대한 연금 보험료 지원 검토

* 농식품부-보건복지부 협력 연구용역(3월), 지원방안 마련(12월)

□ 겨울철(10월~2월) 농산촌 저소득층에 난방연료(땃감) 무상 제공 및
목재펠릿 보일러 보급

○ 15천 세대에 가구당 5m³의 땃감 제공

* ('09 겨울) 55,000m³/11천 세대 → ('10 겨울) 75,000m³/15천 세대

○ 농어촌 뉴타운, 산촌생태마을 등에 목재펠릿보일러 4천대 보급

* 펠릿보일러 보급 : ('09) 3천대 → ('10) 4 → ('12까지) 39

□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초등학생까지 확대

○ 저소득층 초·중·고교생 무상 우유급식 확대(09: 374천명 → 10: 454) 및
차상위계층 초등학생(58천명) 무상급식 신규 실시

* 학교우유급식 사업비 : ('09) 374천명, 216억원 → ('10) 512, 296

다 농어촌 통합형 지역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

◇ 농어촌의 정주체계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지역개발 주체 육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

□ 지역주도의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정비

- 포괄보조금 제도도입으로 지역주도의 자율적 사업추진체제로 전환
 - * '1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: 9,736억원(120개 시·군) 지원
 - 주거·교통 등 분야별 농어촌 서비스기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
 - 컨설팅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,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

□ 정주체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 및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

- (마을) 상하수도, 주택개량 등 기본생활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
 - 발전모델로 활용할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 주민과 이주희망 도시민이 공동으로 마을 재정비 추진
 - * 전원마을조성사업 61개소(계속 44, 신규 17)
- (소생활권) 영농·생활권 단위로 권역화(3~5개)하여 소득기반, 생활환경, 경관 등을 종합정비, 상향식 지역개발 모델로 발전
 - *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41개소(계속 177, 신규 64)
- (소도읍·거점면) 생활편의 기초서비스 제공 거점지역 개발
 - * 소도읍육성 36개소(계속 28, 신규 8), 거점면종합개발 24개소(계속 8, 신규 16)
- (중소도시) 거점지역과 배후마을을 연계하여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제공방식 다양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 재정비

□ 혁신적 농어촌개발 모델 도입·적용 추진

- 젊은 귀농인력 및 농어업인 등의 정착유도를 위해 쾌적한 주거 환경 및 편의시설을 갖춘 농어촌 뉴타운 조성 추진
 - 기숙형 공립고, 복지·문화·친교 프로그램 및 기존사업과 연계 추진
 - * '09~'11년 시범사업(5개소, 700세대) 추진 후 농어촌지역개발 주요모델로 발전

□ 농어촌 환경 및 주거여건 개선

- 농어촌주민이 주택을 보다 쉽게 신·개축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한도 상향조정 및 지원물량 확대
 - * 세대당 융자한도/지원물량 : ('09) 40백만원/7천동 → ('10) 50/8
- 농어촌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노후주택 고쳐주기 활성화
 - 자원봉사자·봉사단체 등과 연계, 농어촌 소외계층 노후주택 개·보수
 - * 지원계획 : ('09) 113가구 → ('10) 130
- 고령 노인 등을 위한 집단거주 주택인 공동체형 농어업인 홈* 조성
 - * 연구용역('10), 시범사업 추진('11)

□ 다양한 유형의 지역개발 주체 육성으로 활력 증진

- 마을리더, 공무원, 컨설팅 업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
 - 교육이수자 풀을 구축, 마을사무장 채용 등에 활용
 - * 사무장 채용 계획 : ('09) 465명 → ('10) 605 → ('14) 1,000
- 도시 우수 인력을 농어촌 지역개발에 적극 활용
 - '귀농·귀촌 종합센터'와 연계, 시·군의 도시민 유치활동 지원
 - 도시-농어촌을 연결하는 인재 매칭 시스템 구축

4 농림어업 생산기반 확충

가 농업생산기반 정비

◇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영농 기반 확충 및 새만금을 비롯한 간척지의 미래지향적 개발 추진

- 안전영농을 위한 재해예방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, 농업용수는 지역용수(농업·생활·환경용수 등) 개념의 개발·관리로 전환
 - 재해취약 저수지 양배수장 보수·보강 집중 지원(410지구)
 - 상습침수 농경지 120지구 30천ha 배수개선(23지구 4천ha 준공)
 - * 예산 편성방식개선(지자체 자율편성 → 중앙), 재해우려지역 집중 투자
 - 용수개발은 생활·환경용수 등의 다목적 수요를 반영
 - * 저수지 등 67개소 공사 시행
- 새만금을 수출형 복합농업단지로 개발
 - 관계부처 합동, 「내부개발 종합실천계획」 수립(1월)
 - 농업, 관광, 국제업무, 과학연구, 신재생에너지, 도시 등 종합개발
 - 방조제공사 완공(4월) 및 내부개발을 위한 방수제 공사 착공(7월)
 - * 방수제 신규 착공 9개 공구 54Km
 - 다기능부지(200ha)를 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착수(12월)
- 간척지는 지구단위(zoning) 개념을 도입하여 첨단유리온실, 축산·원예, 가공·유통시설단지 등 미래형 농업단지로 개발
 - 준공후 미처분 간척지(11천ha)를 우선 활용, 사업시행중인 지구는 기본구상에 맞는 기반시설 확보 추진
 - 「미래형 농업단지 지정·관리에 관한 지침 및 법률」 제정 추진
 - * 단지 지정기준 및 절차, 입주업체 지원, 간척지 임대분양 원칙 등

나 농업분야 4대강 살리기 사업

◇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수자원 확보 및 하천 수생태계 보존

○ '12년까지 저수지 뚝 높이기 96개소 및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추진

□ 물부족 시대에 대비, 농업용 저수지 96개소 뚝을 높여 2.4억^m의 추가용수 확보

○ 농어촌의 다양한 용수수요에 활용하고, 비영농기에 하천으로 흘러보내 수생태계 보존 및 수질개선에 기여

* '09년도 20개소 착공, '10년도에 60개소 착공 → 2012년 완공

· 섬진강유역내 9개소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구 7개소는 '11년 착공

○ 설계시 지역 의견 및 특성을 반영, 저수지 수변(水邊)을 명소로 개발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 방안 마련

□ 영산강 수질개선과 상습적인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영산호·영암호 배수갑문 및 연락수로 확장 추진

○ 영산호바닥 오염 퇴적물 배출을 위한 「저층수 배제시설」 설치

○ 어도 등 생태복원 시설과 전망대 등 지역의 랜드마크 시설을 설치하여 휴식·조망·관광 등 다기능 공간으로 조성

* '10. 4월에 착공하여 용지매수·배수갑문 가물막이 공사 시행

□ 4대강 상류 산림의 토석유출 예방과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 증진 위해 사방사업, 숲가꾸기, 조림 등 실시

○ 타당성평가 및 실시설계(상반기) 후 착수, 연말까지 완료

* 주요 사방사업 : 사방댐 280개소, 계류보전사업 30km

다 어촌·어항 종합개발

◇ 어촌정주환경, 어촌관광기반 조성 및 어항시설 확충을 통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 소득증대 도모

□ 어촌·어항관광개발, 어촌종합개발 등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

- '10년에 신규사업 5개소, 계속사업 23개소에 209억원 지원
-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항개발사업 60%이상 조기 발주(1분기)

□ 새로운 소득원으로 정착된 어촌체험마을의 운영 활성화

- I 단계사업(112개소)을 조기 완료하고, II단계사업 추진여부 결정(7월)
- 마을별 운영상태를 구분하고 미흡마을(20여개소)은 정비(10월)
*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조사 및 진단 연구용역 추진(2~7월)

□ 생산·유통·가공·관광기능을 겸비한 복합기능 어항 개발

- '08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한 6개항의 방파제·물양장·부지조성 등 어항개발계획 수립
- 기존어항의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·확장 및 친수·조경시설 등 어항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

* 국가어항 34개항 1,420억원, 지방어항 44개항 541억원 투자

□ 안정적인 해외 수산자원 확보 및 수산물 수출기지 건설을 위한 해외 어항개발 추진

- 남태평양 참치어장 인근 솔로몬제도 어항개발 타당성 조사(3~10월)

라 산림기반 확충

◇ 임도, 사방댐, 백두대간 활용기반 조성 등 산림 SOC 사업 확대 및 주요지역 산림복원 추진

- 산림 보호와 경영, 바이오매스 생산의 기반시설인 임도 확충
 -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 및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작업도 설치
 - * 간선임도 및 작업도 : 580km, 716억원
 -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
 - * 임도 구조개량 사업 : 442km, 249억원

-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확대하여 수해 최소화
 - 산사태 피해 예방, 수원함양 및 산지 안정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
 - * 사방댐 : 695개소, 1,321억원 / 계류보전사업 : 61km, 82억원
 - 산불진화 헬기 취수원, 가뭄시 농업·생활용수로 활용 가능한 ‘물가두기 사방댐’ 신규 조성(10개소 70억원)
 - 산불진화용 헬기 취수원이 없는 중요 보호 산림지역에 시설

- 백두대간·DMZ 일원 활용기반 조성 및 주요지역 산림 복원 추진
 -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·테라피단지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토지보상·기본계획·설계 등 본격 추진
 - DMZ 자생식물원 조성 및 DMZ 평화의 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
 - 한국전쟁 참전국(16개국)을 상징하는 ‘세계평화산림휴양단지’ 구상
 - 훼손된 백두대간보호지역(9ha)·민통선이북지역(41ha)·전통사찰(7개소) 주변 산림복원 및 독도 복원사업 설계 추진

5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

가 금융지원 시스템 개편

◇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, 금융관리 기능강화, 보조금 개편 등을 통하여 금융지원의 효율성 제고

- 정책자금 시중은행 전면 개방 등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
 - 정책자금 취급기관을 농·수협에서 시중은행까지 확대, 경쟁체제 도입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유도
 - 농업정책자금의 대출취급을 희망하는 은행을 선정, 약정 체결(연중)
 - 신용도·사업성 평가에 기초한 신용대출 추진('10 : 1,000억원)
-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을 탈피,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기능강화 방안 마련 검토
 - 리스크가 큰 사업 및 대규모 사업 자금 지원, 신용보증,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등 전문화된 농식품 산업 금융 추진
 - 농수산기금의 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 관리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
-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합의된 보조금 개편 추진
 - 보조금 개편원칙의 「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」 반영여부 지속 점검
 - 경제성(B/C, IRR 등) 평가를 통해 사업 존속여부 판단
 - 사업 통폐합을 통한 집행체계 효율성 제고('10: 184 → '12: 100개)
 - 품목단체 육성과 연계, 보조금 지원시 품목단체 추천 등 역할 강화

나 투자기반 확충

◇ 농식품 분야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민자유치 활성화

○ 시장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'모태펀드' 조성

□ 그동안 농어업 분야 투·융자는 정부재정에 크게 의존

* 현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민간투자는 전무

○ 정부 중심의 재원배분에 따라 투자 효과성 저하, 민간투자 위축 등 비효율적 배분 초래

□ 농식품 분야의 투자대상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

○ 우수 기업 발굴 및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농수산식품 기업 DB 구축
- 전략적 투자 유치(IR) 활동 등과 연계, 유망기업 집중 홍보

○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한 핵심사업을 선정, 집중 관리

* 국가식품클러스터, 대규모 농어업회사, 시군 유통회사, 첨단유리온실 등 중점 유치

□ '농식품 모태펀드'를 조성('10년 예산안 : 600억원), 시장자본 유입을 촉진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어업경영체 육성

○ 한우·양돈산업, 천일염, 전복 등을 투자대상으로 우선 검토

- '10년 하반기 모태펀드 운용개시를 목표로 상반기내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 제정 추진

□ 외국인 투자 유인 발굴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한 「외자유치 전담반」 운영(1/4분기)

○ 지자체, KOTRA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외자유치 활동 추진

○ 글로벌 식품기업 및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('10년 3회)

다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일자리 창출

- ◇ 성장률·고용유발효과가 큰 식품분야 창업 지원 강화
 - 식품기업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교육, 컨설팅 지원
- ◇ '10년도 농림수산물식품부 신규 일자리 29,000여개 창출
 - 인턴·R&D 기술인력, 4대강 살리기 등 녹색성장, 생산유통

□ '09년 하반기부터 농림어업 경제는 회복되고 있으나 고용은 정체되고 있어, 지속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 필요

○ 농림어업 GDP : ('08, 3/4분기) 77,820억원 → ('09, 3/4) 80,260(3.1%증)

○ 농림어업 취업자 : ('08, 3/4분기) 1,843천명 → ('09, 3/4) 1,799(1.4%감)

□ 농림수산물식품 분야 일자리는 국가 전체의 약 16.9%, 특히 식품 분야는 높은 성장률과 고용유발효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큼

○ 식품분야 성장률 : '99~'07년 평균 6%(경제성장률 5.6%)

○ 식품분야 고용유발계수 : 12.1명/10억원(전체산업 10.6)

* 고용유발계수 : 어느 생산부문에서 생산물 한 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 + 생산과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

□ 식품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창업지원 체계화

○ 농수산물유통공사, 창업컨설팅전문가 등과 품질향상·비용절감 프로그램 마련 등 창업지원 체계화로 창업 성공률 제고

○ G20, 한국방문의 해, 한식세계화 등과 연계해 일자리 확대

* 2002년 월드컵 특수로 외식분야 일자리 전년대비 25만명 증가

□ 농어업 생산분야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창업지원 확대

- 가업승계 영농·영어 인력에 대한 파격적인 교육, 컨설팅, 생산기반 지원
- 우리술, 장류, 천일염, 기능성식품 등 「1+2+3차 복합산업」 창업 지원

□ '10년도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신규 일자리 29,000여개 창출

- (직접일자리·공공) 청년 실업난 해소, 저소득층 공공근로, R&D 기술개발 분야 9,646개
- (녹색성장) 4대강 살리기, 숲가꾸기 등 녹색산업기반 조성, 농어촌 지역종합개발 분야 16,646개
- (생산/유통기반) 원예 등 생산기반 및 시군유통회사 건립 등 중장기 사업 분야 2,711개

□ 농어촌 서비스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일자리 확대

- 정보화, 마케팅, 관광 등 다양한 직종 경험자의 귀촌을 지원해 다양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사업의 운영 인력 공급
- 농촌형 공동체 회사, 마을법인 등 신규 인력 수요처 개발

□ 농림수산물분야 일자리 정보제공 사이트 운영 강화

- 유관기관, 유망 농식품기업, 농업법인, 지자체와 연계하여 등록정보를 갱신하고, 홍보를 확대(www.agrojob.kr)